

세대, 계급, 위계

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Generation, Class, and Hierarchy : 386-Generation in Power and Increase in Inequality

저자 (Authors)	이철승 Cheol-sung Lee
출처 (Source)	한국사회학 53(1) , 2019.2, 1-48(48 pag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3(1) , 2019.2, 1-48(4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사회학회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23175
APA Style	이철승 (2019). 세대, 계급, 위계. 한국사회학, 53(1), 1-48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연구논문

세대, 계급, 위계: 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이 철 승**

본 연구는 1987년 이후, 386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과 부의 불평등한 축적 과정을 ‘한국형 위계체제의 구조화/제도화’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이 글은 386 세대가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국가’에 대하여 시민사회로부터 국가를 점유해 가는 ‘점유의 정치’(politics of occupation)에 주목한다. 둘째, 이 글은 세계화와 함께 격화되는 시장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자본의 주도로 기업조직과 노동시장에 수립된 ‘위계 체제’와 그 체제 하에서 최대 수혜를 입은 386 세대의 ‘기업 내 권력’에 주목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두 과정을 통해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내적으로 응집된 ‘세대의 권력자원’을 시민사회, 시장, 국가를 가로질러 수립하였고, 이로 인해 세대 간 불평등이 증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386 세대가 공식 시민사회조직과 국가의 선출 권력직에서 여타 세대를 압도하는 권력자원을 축적했음을 자체 수집·가공한 데이터를 통해 실증한다. 또한, 386 세대는 기업조직의 최상층 리더쉽과 상층 노동시장의 자리들 또한 불균등하게 점유함으로써 시장에서도 ‘세대 권력’을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가로지르는 386 세대 네트워크의 권력자원화는, 결국, 386 세대의 더 긴 근속년수, 더 높은 소득 상승률과 더 오랜 최고소득 점유를 통해 청년 및 노인 세대와의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필자는 386 세대의 등장과 함께 구조화된 한국사회의 지배·관리·수취 체제를 ‘네트워크 위계’라는 개념을 통해 이론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의 정치’를 촉구한다.

주제어: 386 세대, 세대의 권력자원, 점유의 정치, 세대 간 불평등, 네트워크 위계, 세대 간 형평성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과제번호: 2018S1A5A2A03039022, 과제명: ‘세계화와 세대 간 불평등의 구조’)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chslee@sogang.ac.kr).

I. 서론: 왜 ‘세대’와 ‘불평등’을 연결시키는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투쟁을 주도한 세력(시민사회진영)은 광주와 1987년 민주화, 1997년 정권교체, 그리고 2016년의 ‘촛불혁명’을 통해, 개발독재정권이 주도했던 위로부터의 산업화 전략과 권위주의적 통제 시스템을 공식적인 민주주의의 영역에서 일정 정도 몰아낸 듯이 보인다. 전쟁/산업화 세대와 386 세대가 여러 번의 충돌을 거듭하며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였으며, 어느새 전쟁/산업화 세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386 세대가 한국사회 권력구조의 정점에 올라 있다. 하지만, 386 세대가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쩌면 더욱 심화된 ‘불평등 구조’를 가진 사회가 되었다. 이른바 1987년 체제는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에 대한 국가 통제를 약화시켜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확대하였고, 1997년의 외환위기는 비정규직을 확대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었다(정이환, 2013, 전병유·신진옥, 2016).

민주화와 세계화(경제적 개방·정보화·금융화)는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소통, 더 많은 자유, 더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구조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건만, 도대체 왜 우리는 더 격화된 입시경쟁과 취업경쟁, 심화되고 고착화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가?

이 연구는, ‘민주화의 완성(공고화)’과 ‘불평등의 심화’라는 현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세대의 정치’를 이론적 축으로 설정한다. 왜 한국 사회의 불평등 연구에 ‘세대’를 중심축으로 놓아야 하는가? 필자는, 세대 균열의 축을 통해 동시대인들이 직면하는 불평등의 구조와 불평등을 경험하는 방식의 핵심적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의 2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는 현 노동시장 참가자 및 은퇴자들은 두 차례의 금융위기가 노동시장에 가한 충격을 각기 다른 입장과 위치에서 겪음으로써 소득과 자산의 축적에 있어서 극적으로 다른 경험을 했다. 80년대와 90년대 고도 성장기의 수혜가 당시 노동시장의 30~40대에 집중되었다면, 97년 외환위기는 당시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임금노동자 세대, 그리고 당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하던 20대 중후반 세대에게 집합적인 트라우마와 같은 상처를 남겼고, 그로 인해 벌어진 격차는 ‘복구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2010년대 격심한 정규직

진입투쟁을 경험하는 오늘의 20대가 보다 공정한 기회를 염원하며 든 촛불과, 민주화 투쟁에 젊은 날을 바치고 퇴행하던 민주주의를 구하려는 오늘의 50대가 든 촛불의 의미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것이 만하임이 주목했던, 다양한 세대가 동일한 연대적 시간을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완전히 상이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표현한, ‘동시대의 비동시성’(만하임, 2013[1928-9]: 28)이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권력과 부의 불평등이 구조화된 과정에 ‘세대의 정치’가 개입된 과정에 주목한다. 즉, 한 세대와 다른 세대가 각기 다른 ‘이념과 정체성,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경쟁하며 쟁투하는 과정에서 불균등하게 형성된 세대 내 응집성과 정체성의 차이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각기 다른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세력으로서의 ‘세대 집단들’이 세계화와 정보화의 충격에 반응하고, 그 충격을 기회로 전화시킨 정도(전략)에 따라 이 세대 집단들이 시장에서 점유한 부의 규모에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했을 것이라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급변하는 외부세계의 ‘생태적 변화’에 각 세대로 특징지워지는 사회세력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응했을 것이고, 이 적응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각 세대가 시장에서 점유하는 소득과 부의 축적이 다른 수준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세대의 정치가 불평등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네트워크 위계’의 구조화 과정으로 이론화한다. 산업화 세대의 리더들은 동아시아에 고유한 유교 문화에 장착되어 있던 ‘위계 구조’¹⁾를 수출지향 산업화를 위한 협업 시스템으로 전화시켰다. 반면, ‘386 세대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자원동원-세대 네트워크’를 이 위계구조와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자본에 의해 주도된 내부자와 외부자에 대한 차별적 보상체계 도입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세계화와 함께 가속화된 경쟁과 경기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자본의 주도로 확립된 ‘체중조절 시스템’은, 구조변동기에 일정수의 ‘내부자’를 필요로 했고, 386 세대 및 그 바로 다음 세대(1970년대 출생 코호

1) 이 글에서 ‘위계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일 것이다. 하나는 동아시아 유교문화에서 유래하여 동아시아 관료제의 기본구조를 형성하는, 연령에 기반한 ‘연공구조’이다. 이 구조는 연장자에게 보다 큰 권력과 보상을 부여하며, 연령이 낮은 자는 연령이 높은 자에게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노동의 성과를 상찬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직사회에서의 인정과 후계지위(에 대한 가능성)를 보장받는다. 다른 하나는 세계화와 함께 도입되어 확산된 노동시장 유연화 기제인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배·종속 관계,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한 3중의 위계화 과정(이철승, 2017)이다. 필자는 동아시아적 연공구조와 세 가지 노동시장 지위가 상호 연계와 결합을 통해 얹히고 쌓여(“layered”; Mahoney and Thelen, 2009) 제도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동아시아적·불건적 신분제를 현대로 소환하며 ‘신분계급화’되고 있다고 본다.

트)의 상당수는 내부자로 ‘이미’ 입직해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386 세대가 산업화 세대로부터 전수받아 완성한 이 조직/노동시장 구조의 유형을 ‘네트워크 위계(Network Hierarchy)’²⁾라 명명하고 이 글의 말미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론화를 시도한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현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명하기 위해 세대의 정치와 세계화/개방화의 조직구조의 합리화 과정이 얹히고 결합하는 과정을 새로운 한국형 지배와 착취 구조를 태동시키는 과정과 등치시킨다. 이 과정은 386 세대의 이상과는 별개로 386 세대의 리더들이 국가기구 내에서 정치적 권력자원을 확보해 가는 과정과 시장에서 진행되는 합리화와 (자본에 의한) 착취·지배의 과정에 편승하는 이중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실증하고, 그에 기반하여 ‘한국형 위계체제’의 구조화 과정을 이론화하는 것이 이 글의 최종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분배의 원리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글을 맺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본 연구의 세대 개념

한국 사회에서 세대의 문제는 세대별 정체성이라는 화두를 불러들인다. 특히, ‘세대’는 특정 연령대에 특정 역사적/세계사적 사건과 정치적·문화적 변동을 ‘집합적’으로 겪으며 ‘세대 내부의 언어와 코드, 기억에 기반한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낸다. 한국 사회에서 세대의 정치가 다른 사회보다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한국의 경제와 정치 변동이 다른 어느 사회보다 격렬하고 빠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는 4.19 세대, 긴급조치 세대, 광주 세대, 1987년 세대, 1997년 외환위기 세대, 2016년 촛불 세대와 같은 ‘결정적 사건(pivotal event)’을 집합적으로 경험한 다수의 ‘세대군’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격동의 한국 현대사에서 ‘운동의 세대군’들은 세대 내적인 강고한 연대의식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사회운동 세력’으로 진화했다는 점에

2) 이 논문에서 개념화하는 ‘네트워크 위계’란, 직급과 연령에 기반한 상명하복의 문화 및 제도를 통칭하는 ‘위계체제(hierarchical system)’와 그 체제 상층의 리더들이 조직의 내부와 외부에 수립한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을 결합시킨 지배의 양식이자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조직 상층의 리더들이 하급자로부터의 ‘조직체제를 통한 노동의 동원’과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및 자원 동원 및 교환체제’를 결합시켜 수립한 수취·지배·관리 체제를 일컫는다.

서 전형적인 ‘만하임적 세대’(Mannheim, 2013[1928, 1952])라 볼 수 있다. 다만, 만하임의 세대 정의는 ‘공동 운명(common destiny)에 대한 사회 운동적 참여’의 의미가 너무 강해 역사적 경험을 집합적으로 공유한 ‘거대 코호트’를 대표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개념이다(박재홍, 2003).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의 다른 구성원에게 운동에 참여한 세대의 중핵은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세대 내 리더 그룹들과 동조자들 간에 ‘의미론적’ 연대감과 강한 혹은 약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세대 전체가 각기 다른 의미와 자원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회운동과 참여를 경유하지 않고도 ‘비의도적’ 수혜-후원 관계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대의 개념화 문제에 있어, 이 연구는 커저(Kertzer, 1983)가 분류한 네 가지 세대의 용법 - ① 친족 계보의 세대; ② 동일 시기 출생과 역사적 사건을 공유하는 코호트; ③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 ④ 특정 역사적 시기의 생존자들 - 중, 포괄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두 번째 개념, ‘코호트로서의 세대’에 바탕을 두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역사적 코호트 세대’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특정 사회에서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이 특정한 주요 사건(자연적 격변, 경제적 위기, 정치적 혁명이나 민주화)을 겪으며 그와 연관된 사회화 과정을 동시에 겪음으로써 형성되는 ‘각인된 기억’과 그에 기초하여 형성된 ‘네트워크’다. 전자(‘각인된 기억’)는 특정 정치·경제적·자연적 격변을 공유했다는 정서적 기억공동체로서 심리구조의 깊은 저층에 깔리는 밑거름이다. 반면, 후자(세대 네트워크)는 역사적 사건의 공통 체험을 통해 구성된 사회적 연결망(social ties)으로서의 ‘동원 네트워크’(mobilization network)이며, 정치 경제적 권력의 획득을 위해 유지되고 보수되고 재구축되며 언젠가 ‘이익 네트워크’(interest network)로 전화될 수 있는 부르디외적 의미의 ‘자본(capital)’이다.

필자가 정의하는 ‘세대의 기회(이철승·정준호, 2018)’는 이 ‘각인된 기억’과 ‘세대 네트워크’ 사이에 놓여 있는 ‘객관적 기회구조(objective opportunity structure)’이다. 결정적 사건으로 인해 특정 세대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그 중 다수가 인지하는 기회(perceived opportunity structure; Kurzman, 1996)인 것이다. 산업화 세대가 최대 수혜를 입었던 1970-80년대의 부동산 폭등기, 386 세대가 스스로 만들어내었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민주화 국면이 바로 세대의 기회의 적실한 예들이다.

‘세대 네트워크’는 세대를 경제적·정치적 자원으로서 공유하는 집합적 ‘주체’(전상진, 2004)가 가미된 개념이다. 경제적 동물로서 인간은 경제적 생산과 이윤 추구,

제한된 자원의 선취와 새로운 기회의 포착, 상품의 생산과 유통,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부의 축적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적대적인 경쟁자와 포획자들로 넘쳐나는 세계에서 인적 네트워크는 더 효율적인 생산과 더 질 좋은 정보획득을 통해 생존과 재생산이라는 생물 본연의 과제를 안정화시키는 필수요소이다. ‘세대’는 이러한 네트워크 중에서 가족을 벗어난 혹은 가족단위로 생존하는 개인이 협업과 경쟁을 통해, 가족을 넘어선 자원을 동원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중 하나이다. 좀 더 쉽게 정의하자면 세대란 비슷한 연령집단의 친구 모임들의 상호 연결된 ‘총체’ 혹은 ‘거대한 동년배 네트워크 덩어리’이자 정치·경제적 이익을 의식적으로 도모하는 ‘정보 및 자원동원 네트워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의 동질적 경험과 기억을 기반으로 오늘 혹은 내일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강하게 혹은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또래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공식 조직들을 ‘비공식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동문, 동창 네트워크들과 소규모 또래모임들이 ‘약한 세대 네트워크’이라면, 전대협 동우회나 **노조 동지회는 특정 정당과 노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강한 세대 네트워크’라 볼 수 있다.

특정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더 강력한 ‘기억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수많은 ‘이익 공동체’들 내부와 외부의 연계활동도 보다 활발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주장은 바로 이 세대 네트워크 구성의 차이로 인해, 세대 간 불평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대의 기회는 세대 구성원 다수에 의해 공유되지만, 세대 네트워크는 그 세대 일부 ‘전위집단’에 의해서 ‘구성’된다. 세대의 기회를 포착한 세대의 일부 구성원들이 더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와 기존에 있는, 혹은 새로이 조직한 위계구조와 결합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혹은 세대 네트워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분투한다. 물론, 이러한 네트워크와 위계구조를 이용한 ‘생존과 축적을 위한 분투’는 특정 세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연구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보편적인 ‘세대 내 분파들의 분투’ 와중에 ‘특정 세대(의 전위분파)’는 ‘(민주화 투쟁을 위한 조직화라는) 특정 경험’으로 인해 더 강고하고 효율적으로 조직화된 세대의 자원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모든 세대를 압도하는 세대 네트워크와 위계체제의 조직자원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민주화를 위해 만들어 낸 조직자원과 경험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정치권력의 배분과 불평등한 자산/소득 분배구조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와 위계체제 구성의 차이는 거대한 코호트 세대 내부에서도, 그리고 특정 코호트 세대 전체와 나머지 세대 간에도 불평등을 형성시킨다. 특정 코호트 세

대의 하위 세대 네트워크 집단들이 내적으로 강고하게 통합·연결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더 오랜 시간 숙성되었으며 이념적으로 동일한 목표와 이상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세대 내부의 응집성이 이익 공동체로 전환될 때 그 응집성은 다른 코호트들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 세대에게 더 많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특정 코호트 세대 내부에 강고하게 통합·연결된 네트워크에서 배제·탈락된 코호트 세대 내부의 집단들은 코호트 세대의 코어 집단이 주도하는 네트워크 상의 분배에서 소외될 것이므로, 세대 내부의 불평등 또한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 코호트 세대 내부의 강고하게 연결된 하위 세대 네트워크들의 출현은 세대 내 불평등과 세대 간 불평등을 동시에 증가시킬 것이다.

2. 세대와 불평등: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기존의 ‘세대 연구’들과 여러 측면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의 세대 문제에 대한 접근은 세대 간 문화적 갈등 혹은 세대 간 정치성향의 차이 등과 같은 ‘세대의 정체성/이념’ 자체에 한정되어 있거나, 세대 간 교육과 계층의 이동성에 한정되어 있었다.

세대 간 문화적·정치적 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세대를 ‘연령상의 세대’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주목하는 ‘역사적 코호트’로서의 세대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이념성향과 투표성향에 주목하는 정치(사회)학의 연구들은 2000년대 들어 각종 선거에서 확인되기 시작한 20·30대와 50대 이상의 ‘세대 간 충돌’을 ‘세대균열’로 묘사하며,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이내영·정한울, 2013; 성경룡, 2015).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당시의 세대를 연령 집단으로 인식할 뿐, 젊은 세대의 진보 성향과 장·노년 세대의 보수 성향의 대립의 근원(코호트의 역사적 형성과 이익 네트워크로의 진화과정)을 질문하지 않았다. 청소년 문제, 혹은 청년 문제에 주목하는 인류학과 사회학의 연구들 또한 ‘청년’을 연령 집단으로서의 세대로 인식하며, 세대 간 문화 차이와 충돌에 주목해 왔을 뿐, ‘세대 간 충돌’의 틀을 ‘코호트 간의 충돌/균열/경쟁’의 문제로 인식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대 간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에 주목하는 사회계층론의 기존의 연구들은 직업 계층의 세대 간(부모 자식 간) 이전(김종성·이병훈, 2014), 혹은 소득 계층의 세대 간 이전, 교육 및 사회적 자본의 세대 간 이전(김위정·김왕배, 2007)과

같이 가족 내 향렬 상의 차이를 세대로 간주함으로써, 역시 ‘역사적 코호트’에 대한 문제의식에 이르지지는 못했다. 다만, 최근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출생 코호트)의 부모부양, 자녀교육, 노후준비 및 생존경쟁에 주목하는 연구들(신동균, 2013)과 민주화 및 포스트 386 세대의 이전 세대와의 코호트 비교를 통한 불평등 연구들(김수정, 2018)은 최근 급증하는 코호트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이 글과 공유한다. 하지만, 최근의 코호트 세대에 관한 연구들 또한 세대의 정치와 그 효과를 구체화시킴에 있어 이 연구가 주목하는 ‘역사적 코호트 내부의 전위집단에 의한 권력자원 동원 및 이익 네트워크로의 전환과 헤게모니화’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이 연구는 세대를 전통 인구학의 코호트 집단으로 이해하되, 이를 (‘세대의 기회’와 ‘세대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 정치적 권력자원, 경제적 지위(자리) 및 소득 불평등의 문제와 연결시킨다. 다시 말해서, 금융위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불평등의 한 근원으로 세대(코호트) 간 점증하는 ‘권력자원(Korpi, 1985)’의 불평등에 주목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산업화·축적전략, 그로 인한 경제위기와 극복의 과정, 그와 동시에 진행된 민주화 과정이 세대를 매개로 각기 다른 방식과 의미를 가지고 그 내적 응집성에서 차별화되는 ‘자원동원(McCarthy and Zald, 1977)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었고, 이 네트워크가 새로운 사회 계층화를 진전시켰다고 본다. 특히, 이 ‘세대 네트워크’ 집단들이 정치와 경제영역에서 구축한 ‘이익 공동체’의 수혜는 이 세대 네트워크 집단들의 출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즉 ‘세대의 기회’의 의식적·주체적 자본화에 동참하지 않은 다수의 세대 구성원들에게도 분배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세대 중심부 네트워크(core generation network)’의 정치·경제적 이익의 독점과 축적의 간접 수혜를 받은 집단을 세대의 ‘반주변부(semi-periphery), 이러한 수혜·배분 구조에서 소외된 세대 내·외부의 하층과 외부자들(예를 들면 청년과 여성)을 세대의 ‘주변부(periphery)’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순간 세대 네트워크에 의해 주도되는 지배, 수취, 분배구조는 때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계급’ 혹은 ‘젠더’에 기반한 균열과 겹쳐진다. 세대 기반 균열이 계급 및 젠더와 착종되어 세대 간 격차가 계급 간 격차의 형성에 기여하고, 세대 간 격차의 구조가 젠더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이 글은 기존의 만하임적 ‘사회운동적·정치적 세대’론과 차별되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추구 및 분배 네트워크로서의 세대’론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의 구조화 과정을 해부할 것이다.

3. 이론적 가설

1) 가설 1: 민주화와 세대 간 권력자원의 불평등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한국 사회의 세대와 관련된 독특한 특성은 민주화 운동과 함께 시민사회 형성을 주도한 한 세대의 지식인 그룹이 정권의 교체와 함께 급속히 국가로 진입해 ‘시민사회의 국가화’를 주도한 현상이다. 현대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를 이끄는 운동의 세대는 한 세대의 문화이자 네트워크로, 짧게는 5~8년(80년대 초·중·반 학번) 길게는 70년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 대학을 다닌(혹은 노동조합 및 학생·시민운동에 참여한) 10년에서 15년 정도에 걸친 ‘응집된 정치적·문화적 경험의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위로부터 강력한 조직화 사업을 감행하여 대학가에서 학생회 및 지하 학회조직을 건설한 후 도시 빈민/노동자 계층, 즉 기층 민중과의 결합을 시도했다(Koo, 2001; Lee, 2008; 오하나, 2010; Lee, 2016a; 2016b). 그 결합의 성공여부를 떠나 인류 역사상(러시아, 중국의) 농민혁명의 시대 이후, 이 정도의 광범한 ‘반체제 지식인-민중 연합 세력’이 결집한 사례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찾기 힘들다. 이들이 20-30대에 걸쳐 주도한 이 광범위한 조직화 사업은 한국 시민사회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켰다. 이들은 ‘조직’을 통해 국가에 대항하고 ‘조직’을 통해 시민사회에 ‘침투’(infiltration)하고 대중을 동원하였다. 이 조직화의 경험은 이 세대에게 집합적인 정체성을 형성시켰을 뿐 아니라, 대중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386 세대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사회의 대항권력으로 성장하여 오늘날 주류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에는 민주주의라는 보편가치 외에도 이러한 조직화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이 연구는 이 세대가 형성한 네트워크와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위력(hegemony)에 주목한다. 학연과 지연, 혈연의 원리가 전 세대부터 내려온 한국사회의 패거리 형성의 기본원리라면, 이 세대는 ‘이념’을 통해 이전(산업화) 세대가 스스로를 ‘파편화’시켰던 학연/지연/혈연의 네트워크들을 가로지르는 ‘연대’의 원리를 터득한 세대이다. 이들은 이러한 이념, 조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사회를 아래로부터 형성한 후, ‘국가에 대한 점유’ 작전에 집합적으로 돌입한 세대이다.

2016년 촛불혁명과 함께 국가점유에 성공한 386 세대의 40년에 걸친 장정은 ‘전방침투의 정치’(politics of forward infiltration)의 하위 양식으로서 ‘점유의 정치’(politics of occupation, Klein and Lee, 2019)로 분류될 만하다. 전방침투의 정치란,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이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제도화된 참여경로를 통해 국가의 공식 정치 및 정책 형성과정에 진입하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이해를 실현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초기에는 사회운동과 국가와의 대치와 쟁투과정을 거치지만 점차 사회운동이 제도화(Kriesi, 1996; 정상호, 2011)됨에 따라 사회운동은 민주적 선거 경쟁과 로비의 정치를 거쳐 국가 내의 주요 실행권력을 점유(Gamson, 1990)하기에 이른다. 이 점유의 정치 과정은 시민사회 내에 진지를 구축하고, 생활세계에서 출현하는 사회운동이 주도하는 여론의 정치를 통해 공론을 움직임으로써(Habermas, 1991) 국가정책 및 경제영역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영향의 정치’(politics of influence, Cohen and Arato, 1992)와 명확히 대별되는 전략이다.

386 세대의 점유의 정치는 현 집권세력의 전신인 ‘참여정부’가 지향했던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아니면,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특정 세대 내부의 한 분파에 의한 국가권력의 일시적 장악, 국가자원 및 권력의 외부 지대 추구자들과의 공유, 그리고 총체적 국가실패라는 전임 (보수)정권의 길을 되풀이할 것인가? 이 연구는, 386 세대 정치부문 리더들이 집단적으로 추진해 온 ‘점유의 정치’는 브라질 기층민주주의의 모범사례인 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와 같은 공공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사회운동과 시민사회 리더들의 ‘제도화된, 즉 투명하고 명시적으로 제정된 규칙들에 의한’ 참여(Baiocchi, Heller, and Silva, 2011: 114)가 아닌, 386 세대 내부의 정파 집단들의 조율되지 않은 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적 천거와 추천과정에 의한 ‘자리 나눠먹기’로 귀결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2) 가설 2: 세계화와 시장권력의 형성

이 연구는 ‘어떻게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큰 권력자원을 갖게 되었고, 그 불평등한 권력배분의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 다른 세대연구와는 달리- 정치권력 내부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분배에서도 찾는다. 다시 말해서, 세대별로 다르게 축적된 ‘정치 및 경제적 권력자원’의 배열과 구조가, 세대 간 차별화된 ‘소득과 자산의 분배구조’를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두 가지 이론적 가설을 동반한다. 하나는 특정 세대가 축적해온 정치 및 경제적 권력자원이 ‘시기효과’(period effects)로 인해 다른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대가 향유한 시기효과가 (자본에 의해 주도된) 경제적 권력자원의 ‘분배구조’의 변형(이중화 경제)과 맞물리면서 이 세대에게 더 많은 소득과 자산의 축적을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바는 금융위기 및 각 세대의 노동시장 입직 및 출직과 관련, 각기 다른 세대들이 겪어야 했던 ‘다른 운명’과 각 세대들이 한국의 정치경제적 변동 과정에서 쌓은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총량’과 ‘질’이다. 본 연구는 이 세대가 국가와 시장을 가로지르며 구축한 ‘세대 네트워크’가 윗세대의 발전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네트워크와 질적으로 다른 권력자원의 배열을 낳았으며, 그 배열의 결과로 386 세대와 나머지 세대 간의 지위와 소득의 불평등이 증가되었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386 세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에 의한 자원과 인력의 조직과 배치, 축적 과정의 (재)설계과정에서 어떤 수혜를 받았는지에 주목한다. 이 (재)설계 과정이 세대 간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변형시켰으며, 경제 성장의 과실을 놓고 1990년대 후반 이후 ‘탈 발전국가 시대’에 어떤 분배의 결과를 낳았는지 묻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세대 간 권력의 구조 변동 및 제도화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불평등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386 세대가 산업화 세대와의 대결뿐 아니라 그 아랫세대를 자신들의 ‘세대 권력자원’에 포섭하면서 만들어낸 위계화(hierarchization, Therborn, 2013)³⁾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 ‘위계의 구조’가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새로이 소개된 유연화 된 고용형태와 이중화(정준호·전병유, 2015)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 새로운 노동시장 기제가 한국의 시장과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는 ‘결합노동시장 지위’(이철승, 2017)라는, 노동시장의 상층-중층-하층을 나누는 분절구조를 이용할 것이다.⁴⁾ 이 연구는 386 세대 기업의 리더와 관리자 계층이 이 노동시장 지위에 따

3) 테어본이 제시하는 불평등 창출 메커니즘 네 가지(distantiation, exclusion, hierarchization, and exploitation) 중 위계화란 명확한 관료제적 직무와 명령계통의 수립, 봉건적 신분제, 문화적 가치 체계를 통해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권위가 불균등하게 제도화되는 과정이다. 물론, 이 위계화는 각종 사회적 진입장벽(social closure)을 통한 배제(exclusion)와 결합하여 작동되며 궁극적으로 ‘가치의 불균등한 추출과 배분’을 정당화하는 (맑스주의적 의미의) ‘착취(exploitation)’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한다.

4) 결합 노동시장 지위는 제도적 지위-기업 규모(대기업 대 중소기업), 고용형태(정규직 대 비정규직), 노조존재-세 변수 중 전부 혹은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냐에 따라 특정 임금 노동자 개인을 상-중-하층 중 한 층에 분류시키는 시스템이다. 고용형태가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인지 여부, 일터가 대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 여부, 그리고 작업장에 노조가 존재하는가 여부-이 세 가지 기준 중 대략 둘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노동시장지위의 상층을 차지한다.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대기업 무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유노조 정규직이 그들이다. 이들은 전체 노동시장 임금생활자의 약 20%로 노동시장 지위 상층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지위 중 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채, 다른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 즉 중소기업 무노조 정규직과 중소기업 유노조 비정규직이 노동시장 지위의 중층을 구성한다. 대기업 유노조 비정규직은 둘 이상을 갖고 있으나 2008년 금융 위기와 함께 중층으로 하락하였다. 이 세 그룹들은 임금생활자의 약 30%로 노동시장 지위의 중층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과 2008년 금융 위기 와중에 하층으로 하락한 중소기업 유노조 비정규직이 노동시장 지위의 나머지 하층

른 새로운 계층화 과정의 최대 수혜자였을 뿐 아니라, 이 계층화 과정과 (초기에는) 맞서 싸우던 (386 세대의) 대기업 노동조합 또한 20여년에 걸쳐 내부자(insiders)로 전락하며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매개로 진전된 노동시장 지위 신분화의 공모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386 세대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를 막론하고 (노동시장 상층에 최대다수로 생존함으로써) 이후 20년간 연공제에 의한 임금상승의 최대 수혜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세대 내,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주장한다.

3) 가설 3: 세대 간 불평등 구조와 네트워크 위계의 희생자들

이 연구의 또 다른 과제는 386 세대의 협조, 혹은 이 세대의 자발적·비자발적 참여를 통해 완성된 한국 사회의 위계적 자원동원·지배·수취·분배의 체계인 ‘네트워크 위계’가 세대 간 분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위계의 구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네트워크 외부자들(outsiders of networks)’의 소외가 어느 사회계층과 집단에서 가장 극심한지를 묻는다. 이 글은 산업화 세대가 첫 삽을 뜨고, 386 세대의 리더들이 완성한 한국형 위계구조인 네트워크 위계의 희생자는 청년이라 주장한다.

네트워크 위계의 이중화 및 신분화 메커니즘에서 어떻게 청년층에게 그 폐해가 집중되는가?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과밀화된 대기업 정규직의 연장자 그룹이 전투적 경제주의에 입각한 임금상승 경쟁에 몰입하게 되면, 그 여파는 중소기업체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직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철승, 2016). 또한, 강력하게 조직화된 대기업 정규직 연장자 그룹의 끝없는 임금상승 욕구와 위험업무 회피 성향은 아웃소싱(outsourcing), 비정규직 확대 및 그들의 위험 및 애로공정 전담(이병훈, 2003), 정규직 입직 축소, 사내 하도급 양산,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후려치기(정승국, 2017; 조성재·이병훈·홍장표·임상훈·김용현, 2004; 조성재, 2009)로 귀결된다. 이 연구는 유연화되고 이중화된 위계구조 하에서 착취와 피해가 집중되는 집단은 청년 비정규직이며, 수혜가 집중되는 집단은 노동시장 상층을 점유한 중장년층(40-50대)이라 본다. 또한, 이 연구는 상층 노동시장의 조직연령구조가 ‘마름모꼴’에서 ‘역삼각형’으로 전이되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50%를 구성한다 (중층과 하층의 비율은 - 상대적으로 견고한 상층비율과 달리 - 연구자의 정규직/비정규직 분류기준과 데이터에 따라 변이가 있다. 전병유, 2018 참조). 이 하층은 조직화되지 않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영세 자영업, 그리고 실업 상태를 넘나들며 극도로 짧은 불안정한 계약 속에 ‘연명’하는 계층이다.

정규직 입직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청년층 양질 일자리의 부족’과 ‘청년 세대의 상층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과잉 경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앞의 세 가지 이론적 가설들에 대한 경험적 테스트를 거친 후, 본 연구는 ‘네트워크 위계’의 특징과 위기의 징후들을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세대 간 형평성의 정치’를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III. 경험분석 1. 386 세대의 형성과 정치 구조의 변동: 점유의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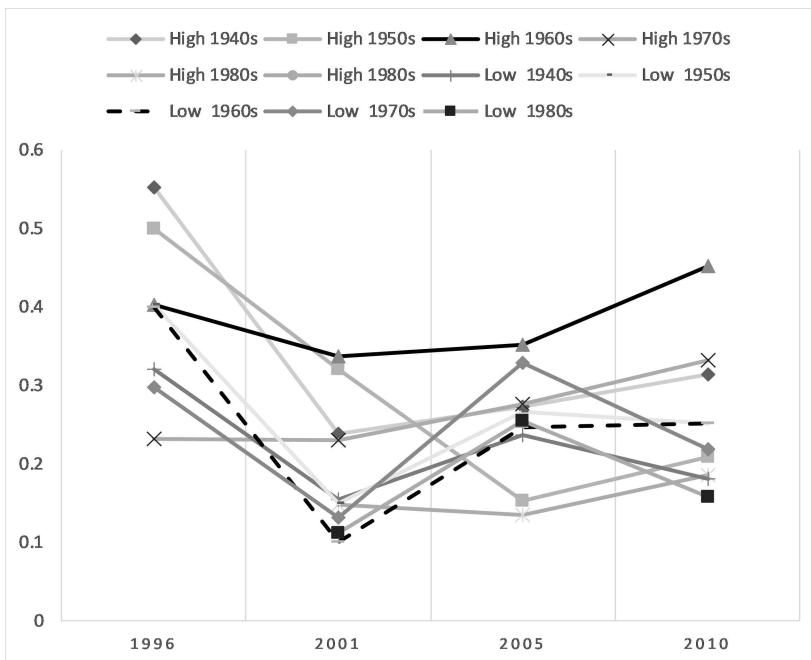
1. 386 세대의 조직적 기반: 시민사회

현대 한국의 시민사회를 이끄는 ‘운동권 세대’는 한 세대의 네트워크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까지 대학을 다니거나 노동조합 운동에 참여한 ‘응집된 문화적 경험의 세대’이고, 한국의 국가를 아래로부터 변화시켜온 거대한 운동블록이다. 1980년대 노동자 민중을 (혁명투쟁의 전선으로) 설득하기 위해 ‘하방’했던 386 세대는 1990년대 시민사회 단체의 ‘CEO’ 혹은 ‘조직/사무총장’으로 - 집단적으로 - 변신한다.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단체 생태계의 성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이 운동의 세대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386 세대는 전국적으로 수천, 수만 개의 시민사회 단체를 새로 설립하였다. 그 단체들은 환경, 여성, 노동, 평화, 종교, 인권과 같은 수백 개의 국가적 지역적 분야별 이슈들로 분화하였고 동시에 종횡을 가로지르며 연대하고 전국조직 및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은수미, 2005; Lee, 2016a; 2016b).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사회의 급속한 팽창과 밀도의 증가가 세대 간 권력자원의 분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Figure 1>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s) 중 1996년, 2000년, 2005년, 2010년치 모듈을 이용하여 시민사회의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voluntary associations) 중 국가 및 자본과의 협상, 사회적 장벽(social closure)의 유지, 시민사회의 이해 및 여론의 정책화에 간여하고 종사하는 ‘공식 시민사회 조직’들(Lee, 2016b; 이철승, 2017) - 노동조합, 정치정당, 전문가 협회 - 에 소속된 각 세대 구성원들의 ‘조직자원’ 분포를 보여준다. 상위 시민단체 간의 동원 네트워크(은수미, 2005; Lee, 2016b)가, 대규모 시민단체들이 쟁투적 활동을 통해 이슈

화하고 정치화하는 시민사회의 ‘이해의 조직화(organization of interests)’의 심화 패턴을 보여준다면, 공식 시민사회 조직의 가입률은 시민단체와 정치정당의 ‘시민적 기초’(civic base)를 계량화한다. 즉, 퍼트남(Putnam, 1993)이 주목했던 사회적 자본 중 국가기관과의 협상, 국가기관의 점유 및 침투에 보다 깊숙하게 관여하는 공식 시민사회 조직들의 대중적 역량을 수량화한 것이다.

<Figure 1> Membership, Formal Civic Associations (Unions, Partie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World Values Survey 1996–2010



Note 1: One individual's memberships with multiple organizations are all separately coun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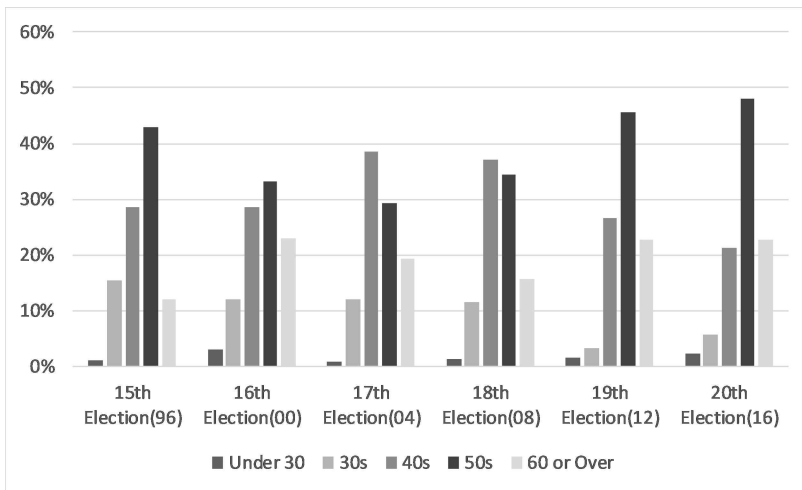
Note 2: 'High' implies '4-year college graduates' and 'Low' implies '2-year college or below'

시계열적으로 386 세대는 2000년대 들어 1940년대 및 1950년대 출생 산업화 세대를 제치고, 2010년대에 이르면 공식 시민사회 조직의 최대 구성세대로 부상한다. 386 세대 중 대학(4년제)졸업자의 공식 시민사회 조직률은 2010년 기준 0.451로 그 윗세대인 1950년대 세대의 0.209와 그 아랫세대인 1970년대 및 1980년대 세대의 0.331과 0.185를 압도한다. 386 세대 비대학 졸업자의 조직률 또한 0.251로 여타

세대의 비대학 졸업자는 물론, 거의 대부분의 여타 세대 대학졸업자들을 압도한다. 이러한 통계지표들을 통해 이 세대의 권력자원은 이들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1990년대부터 구축해온 시민단체들과 노조로부터 지원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386 세대는 이러한 시민사회에 기반한 권력자원을 동원하여 어떻게, 어떤 규모로 정치사회를 점유하였는가?

2. 386 세대의 정치사회 점유

<Figure 2> Age Distributions of Candidates running for Congress, 1996–2016
(percentage)



앞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킬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를 통해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며, 불균등하고 불공정한 원리에 의해 경제적 부의 축적과 배분을 주도했던 산업화 세대의 리더들에 비해, 386 세대의 리더들은 보다 공정하고 균등하게 정치권력을 배분하고 있는가? 산업화 세대에서 386 세대로 세대의 해체 모니가 교체되면서, 어떻게 연령대별 권력의 분포가 재구성되었는가? 이 조직 내 권력 배분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거대 조직에 해당되지만, 이 연구는 자료 접근이 용이한 최상위 권력조직이자 선출직 기관인, 국회의원 입후보자 및 당선자 분포를 먼저 들여다본다. <Figure 2>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기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대별 후보자 분포를 보여준다.⁹⁾ 이 그림은 정당조직에서 지난 30년

동안 386 세대가 어떻게 산업화 세대를 대체하였고, 그 주변 세대를 압도하며 정치 권력을 점유해 왔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1996년 총선에서 산업화 세대를 대표하는 1930년대 후반, 1940년대 초반 출생 코호트들은 660여명의 입후보자를 선거에 내보낸다. 전체의 45%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다. 하지만 이 선거가 산업화 코어 세대가 절정기를 누렸던 마지막 선거이다. 386 세대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급속히 정치권력을 향해 줄달음친다. 1990년대에 이미 어떤 30대들보다도 더 많은 입후보자를 선거판에 진입시켰고, 이들이 486이 된 2004년에는 526명의 후보자를 내며 전체 입후보자의 40%를 점유하게 된다. 앞서 기술했던 바, 20대와 30대를 시민사회의 조직화에 헌신했던 386 세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직후 치러졌던) 2004년 선거를 기점으로 대거 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6년에 이르면, 386 세대는 수적으로 524명의 입후보자를 내며 사실상 산업화 세대를 몰아내고 산업화 세대가 1996년 누렸던 자리로 올라선다. 역사상 가장 높은 입후보자 점유율(47%)을 자랑하며, 정치권력 진입로에 최대다수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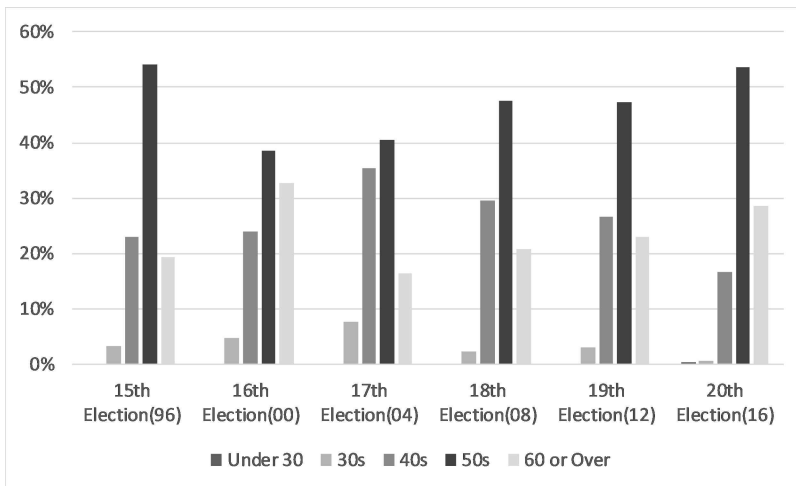
386 세대는 산업화 세대를 대체한 2010년대에 3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386 세대 권력의 하부 지지층은 가장 낮은 수준의 입후보자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40대는 27%(2012)와 21%(2016)를 기록하며, 386 세대가 2000년대 점유했던 40%(2004)와 35%(2008)에 비해 13-14%p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에 이르면 오히려 그 점유율이 이전의 선거보다 더 낮아진다. 30대의 점유율은 더욱 낮다. 현 40대가 30대였을 2000년대에 10%대를 유지했건만 이들은 2010년대에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산업화 세대가 혜계모니를 쥐고 있던 1990년대의 386 세대(386)가 16%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30대는 2010년대 정치판에서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입후보자 분포의 변화는 당선자 분포에 그대로 반복된다. <Figure 3>을 보면, 2016년 총선에서 50대와 60대 당선자 구성비는 무려 83%이다. 산업화 세대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1996년의 63%를 무려 20%p나 추월했다. 반면, 2016년 총선의 30대 당선자는 단 두 명이다(1% 미만으로 그래프 상에서 보이지 않는다). 불과 20년 만에 30대 정치인이 한국정치에서 사실상 거세된 것이다. 40대 점유율 또한

5) 입후보자 분포는 (투표자의 선호에 의해 걸러지는) 당선자 분포에 비해 정당조직 내부의 이해관계와 세력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세대 간 권력자원의 차이를 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 이 자료는 386 세대의 높은 당선율(<Figure 3>)이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적실한 논박이기도 하다. 386 세대 정치인들의 과대대표는 386 세대의 정당 내부 권력장악을 통해 결정된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386 세대 후보자를 선택하는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17%로 역대 최하위이다. 문제는 이러한 한 세대의 과대대표가 정치권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상층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조직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데 있다. 앞의 지표들이 보여주는 현실은 한국사회의 공식 시민사회 조직과 정당, 국회는 386 세대에 의해 과점되었다는 점이다.

<Figure 3> Age Distributions of Elected Congressmen,
1996–2016(percentage)



IV. 경험분석 2: 시장에서의 386 세대의 부상과 ‘새로운 불평등 구조’의 탄생

386 세대의 리더들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직접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자유주의’가 제도화되는 한복판에 서 있었다. 기업에 진출한 이 세대의 다수는 시장에서 격화된 경쟁 속에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으며 세대 안에서 엄청난 경쟁과 분화를 경험했다. 이들 중 경쟁의 승자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기업과 함께, 정보화와 과학기술 혁명의 파도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글로벌 자본주의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재구축되는 시기, 동아시아 기업 간, 사회 간 네트워크가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수혜 또한 이들의 몫이었다.

이 세대가 1997년 금융위기의 칼날을 피해 2000년대 기업 내부에서 최대 다수가 되었을 때, 자본은 세계화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산과 판매 현장에 ‘유연화된 위계구조’를 구축하였다. 기업 내 외부 원하청구조의 완성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단/분절 구조, 기업과 학계, 공공기관 내 젊은 세대부터 도입된 임금과 복리후생의 유연화 실험이 그 예들이다. 전자(원하청구조, 윤성민·홍장표·정우식, 2000; 조성재 외, 2004)의 경우는 산업화 세대가 구축하기 시작한 생산의 위계적 분업구조가 2000년대에 완성된 것이라면, 후자(파견직 및 비정규직 도입을 통한 고용형태의 유연화, 조성재, 2009)는 산업화 세대 집권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던 제도였으나 386 세대가 기업과 노동시장의 상층 위계구조에 등극하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일반화된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기업조직에서 386 세대의 ‘운(luck)’은 이 유연한 ‘이중화된 위계구조’가 도입되어 확산되던 시기에 ‘정규직’의 지위에 세대의 다수가 ‘이미’ 진입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유연화를 통한 이중화 경제가 한국경제와 관료제 조직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리는 동안 386 세대는 내부자의 지위를 가장 대규모로 오래 누린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와 시장의 위계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인데, 조금 더 단순화시켜 이야기하면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와 세계화의 결과는 뒷세대인 산업화 세대의 퇴장이었으며, 시장의 위계화의 결과는 386 세대가 상층을 점유한 위계구조로의 아랫세대의 편입·복속이었다.

1. 1997년과 위계구조의 심화, 확장

기존의 학계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한국 사회의 재구조화’를 ‘1987년 체제’와 구별되는 ‘1997년 체제’의 특징으로 파악하면서, 그에 따른 기업의 인사 및 생산시스템과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그리고 분배구조의 악화 등을 ‘자본과 노동의 대결’의 구도에서 파악한다. 필자는 조금 각도를 달리 본다. ‘1997년 체제’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의 근본적 특징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의 일반화’라기보다는 ‘네트워크 위계의 완성’이다. 서구적 의미의 자유주의적 제도가 깔린 것이 아니라 지구화된 자유주의적 경쟁에 맞서기 위해, 그 경쟁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강고한 위계체제를 구축한 것이 1997년 체제의 특징인 것이다.

1997~8년 금융위기는 386 세대의 기업 내 권력을 극적으로 강화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386 세대가 유교적 관료제와 결합한 권위주의에 ‘반체제 운동’으로 저항

하며 ‘재야’에서부터 대항권력을 구축한 반면, 기업 내 386 세대는 97년 금융위기로 인해 저절로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먼저, 1997년 금융위기의 폭탄은 산업화 세대의 머리 위에서 폭발하였다. 1997년 당시 50대에 접어든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는 추풍낙엽처럼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금융위기를 적체된 인력의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았고, 이 세대는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 없이 ‘구조조정의 칼날’에 몸을 맡겨야 했다. 반면,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으로 기업조직의 바닥부터 중간허리를 구성하고 있던 386 세대는 이 칼날을 무사히 비껴나가며 대부분 생존했다. 그런데, 이들이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권력 강화 요인은 그 다음 세대의 ‘전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1997년 금융위기와 함께 기업들은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정규직’ 사원을 입사시키지 않는다. 입사하더라도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장기 호황기에 입사한 386 세대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화된 채 입사하게 된다. 386 세대는 줄지에 아래 위가 모두 잘려나간 기업조직에 사실상 홀로 남겨진 거대한 ‘세대의 네트워크 블록’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의도하지 않은 금융위기의 효과는 당대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386 세대는 세계화, 금융화, 정보화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90년대에 기업조직의 최하부에서부터 이 물결에 올라탔다. 이들은 생산과정이 전 세계를 거쳐 체인화되고 블록화되며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목도하며 바닥부터 이 시스템의 장착을 직접 자신들의 손과 발로 주도하였으며, 돈이 어떻게 경제에 흘러들어 몸집을 불리고 어떻게 투자수익을 올리는지 몸소 경험했다. 이들은 산업화 세대와 달리 대학에서부터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기본원리를 체득하였고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는 정보혁명의 언어와 논리를 최초로 이해한 세대였다. 시장에서 이들을 대체하거나 경쟁할 인력이 없었고, 이들의 경쟁 상대는 세대 내부 혹은 다른 대륙과 나라에 있을 뿐이었다. 1997-8년 금융위기 후의 자산 대폭락,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붐과 2000년대 중반의 부동산 시장 폭발은 이 세대에게 부족했던, 산업화 세대가 독점하고 있던 ‘자산’과 ‘자본’을 공급해 주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자본, 노동, 토지, 경영의 4요소 중 앞의 세 요소가 이들 손에 쥐어진 것이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 세대는 대기업의 최상위 경영진으로 진입하거나 닷컴 붐과 함께 새로운 기업을 일구어낸다. 금융위기 와중에 살아남았던 ‘후기산업화 세대’(1945-55년생)는 2000년대 세계화와 정보화 물결 앞에서 손쉽게 퇴출되었다(<Figure 4> 참조). 그로부터 10년 동안, 386 세대가 후기산업화 세대를 경영 전면에서 몰아내고 한국의 재벌들은 (임원

진의) 세대교체를 완료한다.⁶⁾

그렇다면, 왜, 어떻게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자유주의의 원리와 어긋나는 ‘신분적 위계화’가 더 가열되었는가?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자면, 필자는 이를 자본과 386 세대(대기업) 노동조합 리더들 간의 ‘의도하지 않은 공모(collusion)’라고 해석한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은 사내하청과 파견 및 비정규직, 아웃소싱을 급속히 도입한다. 노조의 강력한 저항으로 정리해고의 비용이 치솟자, 노동조합에 힘이 실리고 비용이 높게 드는 정규직을 뽑는 대신에 글로벌 경제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관리기제들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8년 노사정 대타협과 정리해고로부터 살아남은 386 세대 (대기업 및 공기업) 노조의 리더들은 1990년대의 ‘사회연대’와 ‘사회개혁투쟁’과 절연하고, 대신 세계화와 함께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대기업들의 이윤으로부터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 위해 ‘전투적 경제주의’에 입각한 기업단위 교섭에 더욱 몰입했다(이철승, 2018). 정규직 노조의 전투주의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 압박을 자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했다. 첫째는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다(이철승, 2016). 둘째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을 확대하며, 하청업체에 단가후려치기를 하거나 기존의 비정규직의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다(이병훈, 2003; 정승국, 2017).

이를 통해 자본은 정규직에게 글로벌 기준보다 더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전해 주면서, 동시에 사내유보이윤은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정규직 노동과 자본이 중하층 하청/비정규직을 함께 착취하는’⁷⁾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이 분할통치(divide-and-rule, Jessop, Bonnett, and Ling, 1984; Rogers, 1990; Weingast, 1997) 전략의 최대 수혜자는 자본뿐 아니라, 이미 대기업 위주로 상층 노동시장에 내부자로 진입해서 있던 연공제로 인해 최대의 임금상승률을 보전받게 된, 386 세대 리더들의 동기들과 주변세대(현 50대와 40대 중·후반)의 상층 노동자 집단 전체이기도 했다.

2. ‘네트워크 위계’ 체제와 세대 간 불평등

앞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자는 세 가지 테스트를 시행해 본다. 첫 번째 테스트

6) 386 세대가 30대 후반부터 기업의 임원진으로 등극하기 시작한 경향은 김대중-노무현 정권기 정치권과 국가부문에서 386 세대의 약진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의 기업들은 정치권 및 국가부문의 세대교체에 맞춰 국가권력에 ‘연줄이 닿는 동기’들을 이사진으로 배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정치권/국가부문의 386 세대가 장기집권을 할 경우, 기업부문의 386 세대가 장기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 또한 ‘세대 네트워크’의 힘이라 볼 수 있다.

7) 급속노조 전직 간부와의 인터뷰 중 발췌.

트는 상층 노동시장에 386 세대가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들은 과연 다른 세대에 비해 과대 대표되어 있는가? 필자가 기술한 대로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금융위기 중에 조직에서 퇴출되고 혹은 입직에 실패하는 동안 이들은 조직 내·외부에 구축한 강고한 네트워크와 함께 더 ‘많이’ 생존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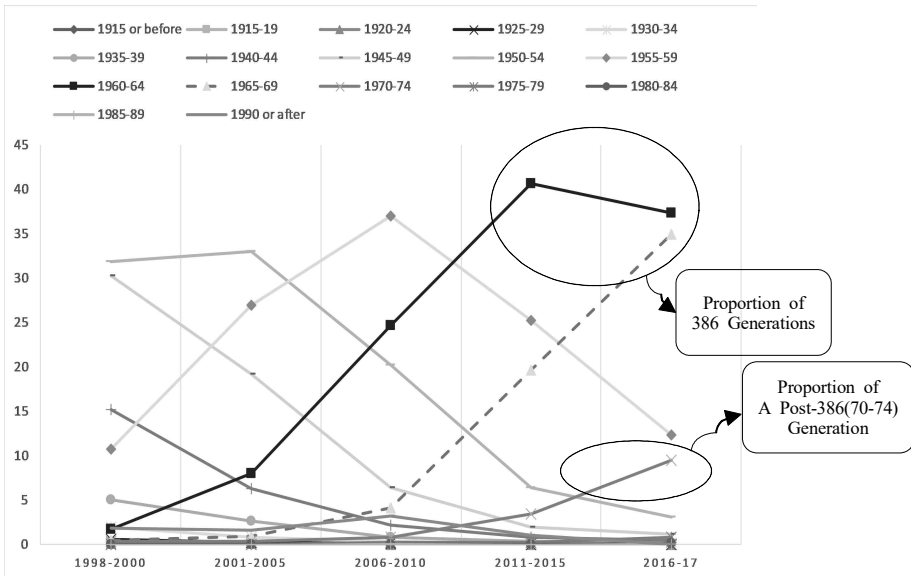
두 번째 테스트는 이들이 각 노동시장 지위 안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오래’ 생존하였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들의 조직 내 근속(생존)년수는 다른 코호트 세대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긴’가? 이에 기반하여 이들은 여타 세대에 비해 ‘연공제’의 혜택을 더 받고 있는가?

세 번째 테스트는 이들이 여타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386 세대는 임금, 판매수익, 이자, 임대료, 금융 소득 등을 합한 총 소득에서 여타 세대에 비해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가? 소득 상승의 정도 또한 여타 세대에 비해 높은가? 386 세대가 더 높은 소득을 향유하고 있고, 그 소득의 향유 기간 또한 다른 세대보다 길며 그 증가율이 더 높다면, 그리고 그 세대의 수가 다른 세대보다 상층에 더 많고 오래 남아 있었음을 확인한다면, 이 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노동시장 지위에 기반한 불평등의 존재는 주장에서 현실로 격상될 수 있을 것이다.

3. 386 세대의 자리독점

<Figure 4>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국내 100대(2017년 기준) 대기업의 임원(상무이사 이상 대표이사까지) 연인원 9만 3천여 명의 코호트 세대별 분포와 시기별 변화를 나타낸다. 앞서 확인한 정치권력(정당과 의회)에서의 386 세대의 ‘과점’ 현상이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다. 다음에 확인할 <Figure 5>가 상위 20퍼센트 정도의 임금 노동자의 세대별 분포 변화를 보여주는 반면, <Figure 4>는 상위 0.02% 이내의 임금소득자이자 국내 최대 기업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세대별 분포를 보여준다. 1960~64 및 1965~69년 출생 코호트들은 2000년대 초반 100대 기업 임원진의 8.9%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다음 10년이 지나면, 이 코호트의 비율은 60.3%로 뛰어오른다. 2000년대 초반 1950~59년 코호트의 비율이 60%였으며, 그로부터 5년 전인 1990년대 후반, 1945~55년 코호트의 비율이 62%였음을 고려한다면, 50대의 60% 임원진 점유율은 일종의 황금률이었다.

<Figure 4> Age-Period Distribution of Corporate Directors in the Top 100 Firms, 199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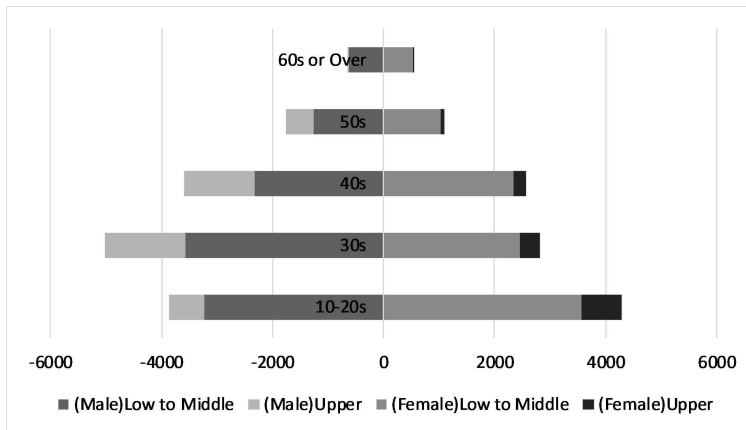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17년 자료를 보면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연공제 순환의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이전 세대들이 50대 초·중반에 최대 구성비율을 찍고 50대 후반부터 급속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는 데 비해 1960~64 코호트는 2010년대 초·중반 최초로 40%를 돌파하더니, 2010년대 후반에도 수위(37%)에서 내려올 줄을 모른다. 그 사이 임원진에 진입하기 시작한 후기 386 세대(1965~69년 코호트) 또한 35%를 기록하며 386 세대의 임원진 장악률은 70%를 훌쩍 넘기에 이른다. 50대와 60대의 임원진 비율은 정치권에서의 동일 세대들의 (압도적인) 국회 장악률(83%)보다 더 높은 86%에 이른다. 한국 기업의 상층 권력 구성의 역사에서 초유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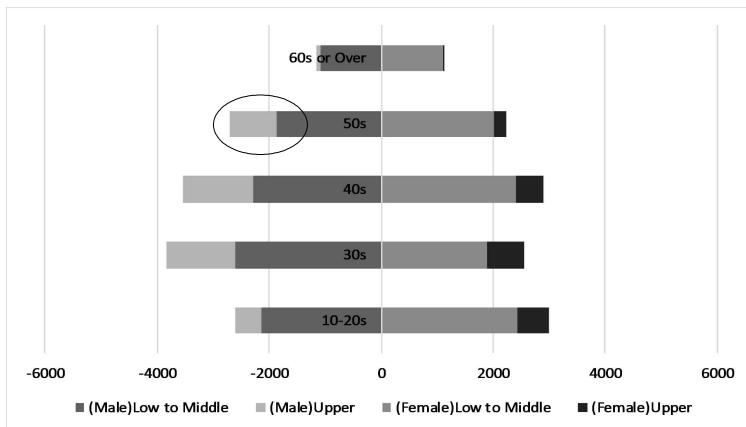
한 세대가 권력을 독점하면, 그만큼 밀려난 세대가 있기 마련이다.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희생된 세대는 그 아랫세대인 40대이다. 1960~64 코호트가 30대 중·후반(1990년대 후반)에 최초로 임원에 진입(2%)해 40대 후반(2000년대 후반)이 되면 25%에 이르며 확실한 주류로 자리매김하였고, 1965~69 코호트가 1%(2000년대 초반)에서 20%(2010년대 초반)로 그 뒤를 따랐다. 반면, 1970~74 코호트는 2000년대 후반 0.3%로 진입하여, 10년 후 오늘날 386 세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4%를 기

록 중이다(성장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라). 50대 후반의 ‘전기 386 세대’가 임원직을 틀어쥐고 놓지 않음에 따라, 40대가 승진하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는 것이다. 이 데이터의 결과와 정치권 데이터를 합산하면 386 세대는 근 20년에 걸쳐 한국의 국가와 시장의 수뇌부 자리를 장기독점하고 있고 아랫세대의 성장은 그만큼 지체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Figure 5> Age Distributions of the High and Middle/Low Classes in the Combined Labor Market Status (by Gender)



<Figure 5-a> Age Distribution in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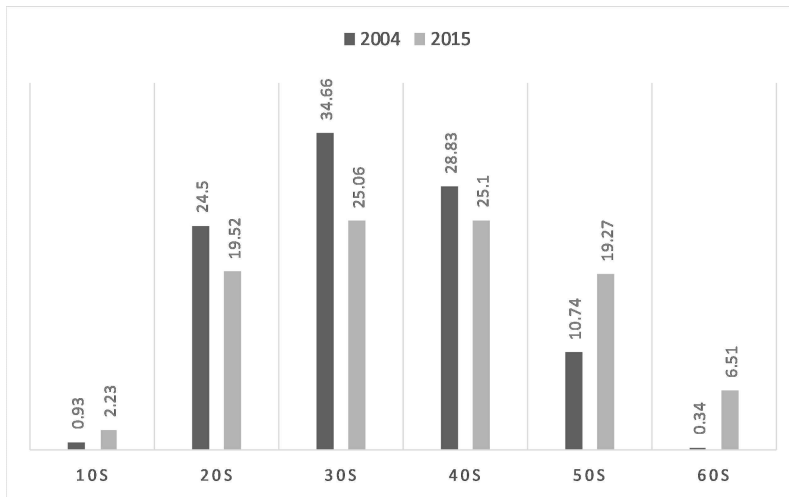
<Figure 5-b> Age Distribution in 2015

Note: Raw Numbers in bar graph, Adjusted by Sampling Weights.

Source: Korean Current Population Surveys, 2004-2015.

<Figure 5>는 2004년과 2015년 결합노동시장 지위 상층의 가중치(sampling weight)를 고려하여 계산한 연령별 분포이다.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2004년에 비해 2015년에 상층 노동시장에서 50대 남성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그래프의 원으로 표시된 부분의 막대그래프는 386 및 그 윗세대의 노동시장 상층에 남아 있는 수가 2004년 50대 및 60대의 수와 비교하여 확연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Figure 6> Age Distributions of the High Class in the Combined Labor Market Statu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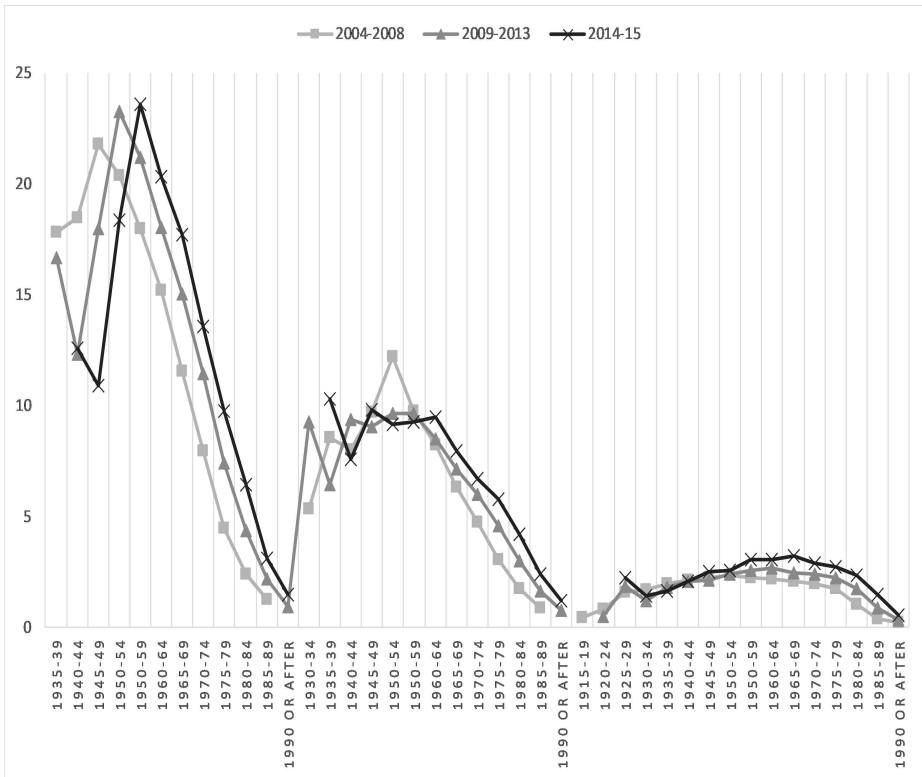
Note: x-axis: age (10 years); y-axis: the share of each age group as a percentage.

Source: Korean Current Population Surveys, 2004-2015.

<Figure 6>을 보면, 2004년 당시 40대의 노동시장 상층 점유율은 28.8%였고 이들이 2015년 50대일 때 19.3%였다. 반면, 2004년 당시 50대 상층 점유율은 10.7%에 불과하였다. 386 세대는 그 윗세대가 50대였을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상층 생존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2004년 그들이 40대였을 때 이미 조직에서 앞 뒤 세대를 압도하는 최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었다. 앞서 서술했듯이, IMF 금융위기를 거치며 바로 위의 세대와 바로 아래 세대가 왜소해진 탓이다. 이로 인해 10년 후 50대에 이르렀어도 이들 중 다수가 생존한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과대대표, 과대생존은 얼마나, 어떤 규모로 지속될 것인가?

4. 386 세대의 장기생존

<Figure 7> Average Years of Work Duration by Combined Labor Market Statuses



Note: High Class: Left, Middle Class: Middle, Low Class: Right
 x-axis: Birth Cohort(5 years); y-axis: Years of work duration.
 Source: Korean Current Population Surveys, 2004-2015.

386 세대는 더 오래 조직에서 생존하고 있는가? <Figure 7>은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포함된 임금근로자들에 한해 ‘현직에서의 근속년수’의 세대별 평균값을 계산하여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같은 연령대라 상정했을 때의 다른 코호트 세대 간 비교 값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 내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2000년대 중반의 1960년대 출생 코호트와 2010년대 중반의 1970년대 출생 코호트의 근속년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혹은 2000년대 중반의 1950

년대 생과 2010년대 중반의 1960년대 생의 근속년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Figure 7>의 결합노동시장 지위 상층 그룹(맨 왼쪽 그래프)의 경우, 1950년대 초반(1950~54) 코호트가 50대에 진입하던 2000년대 중반에 이들의 근속년수 평균은 20.3년이었다. 1960년대 초반 코호트(1960-64)가 50대에 진입한 2010년대 초반에 이들의 근속년수 평균은 20.2년이었다. 통계적으로 사실상 같다고 봐도 무방한 차이이다.

반면, 1970년대 초반 출생 코호트(1970~74)가 40대에 진입한 2010년대 초반 측적된 근속년수를 보자. 13.6년으로 15.2년의 1960년대 초반 코호트의 40대 당시에 비해 1.6년이 짧다. 196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후기 386)의 2000년대 초반과 1970년대 후반 코호트의 2010년대 초반 근속년수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11.6년대 9.7년으로 2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1970년대 세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 근속년수에 있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⁸⁾

첫째 이유는 앞서 기술한 대로, IMF 금융위기의 여파 때문일 것이다. 70년대 초 중반 및 그 이후 출생 세대는 취업시장에 진출한 1990년대 말, 초유의 금융위기로 인해 입직이 수 년 늦어졌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조로 조직화된) 정규직만 대상으로 한 비교이기 때문에 근로형태의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대별로 근속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은 세대 간 이직율의 차이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노동시장 상층의 386 세대가 안정적인 연공시스템의 유지를 통해 ‘조직에 붙어있기만 하면’ 퇴직 직전까지 (노동시장 상층 기준) 평균 근속년수가 25년에 육박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다음 세대부터는 금융위기의 여파와 ‘유연화 기제’의 도입으로 인해 연공시스템이 부여하는 ‘편안한, 안정적인 임금상승’을 즐기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⁹⁾

5. 386 세대의 소득 상승률과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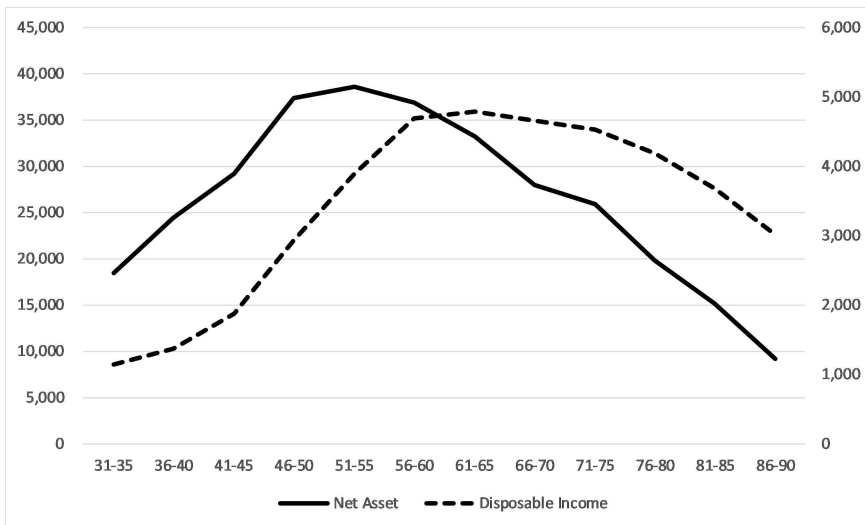
다음 지표는 불평등의 가장 대중적인 지표인 소득이다. ‘386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소득 상승을 기록해 왔는가?’ 연령별 단순비교로 볼 때, 현재

8) 이 차이는 여타 인구학적·교육적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분량상의 제한으로 생략한다. 이하 소득의 세대별 차이 또한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분량상의 제한을 고려) 회귀분석 결과는 생략한다.

9) <Figure 12>에서, 노동시장 중층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그나마 존재하던 연공시스템이 허물어지고 있고, 하층에는 아예 연공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면서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3-5년 단위로 이직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깊이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는 2000년대 세대 내 불평등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다.

노동시장 연공제 위계의 최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386 세대는 2010년대 소득의 수위에 올라 있고 자산은 수위에 근접해 있다. <Figure 8>은 가처분 소득으로 비교할 때, 2010년대 50대에 진입한 1960년대생 코호트가 2010-2017년까지 평균수입의 최정상에 올라 있음을 보여준다. 순자산의 경우는 1950년대 출생 코호트가 역-U자 그래프의 정상에 올라 있지만, 1960년대 초·중반 코호트가 그에 바짝 다가서 있다.

<Figure 8> Net Asset and Disposable Income, by cohort



Note: X axis: Birth Cohorts. Yaxis on the left: Net Asset. Yaxis on the right: Disposable Income. Unit: 10,000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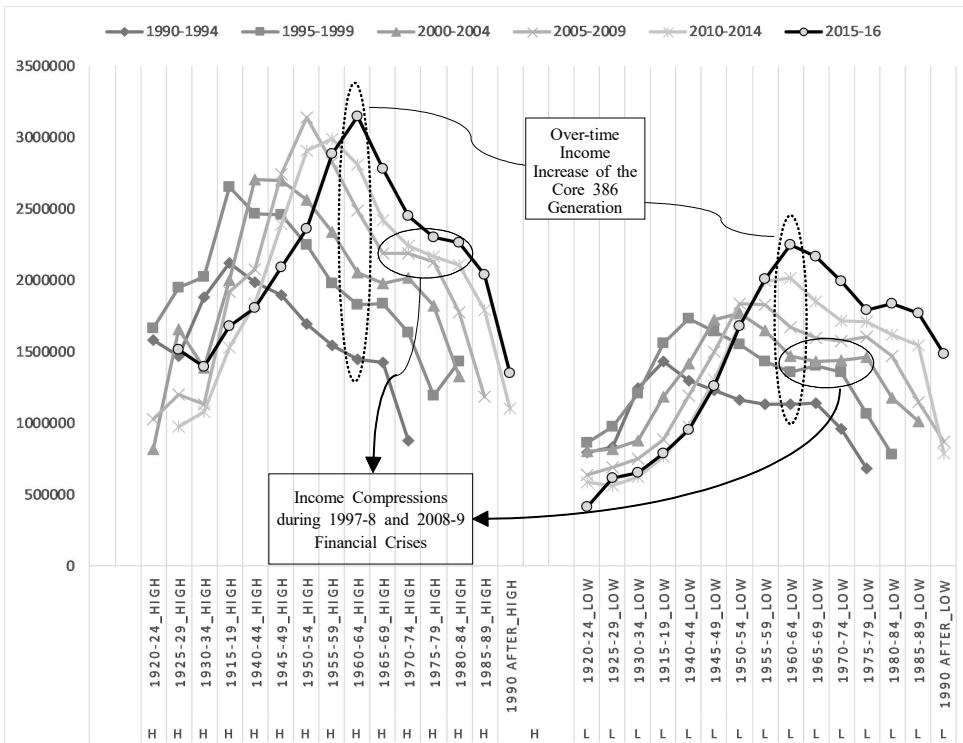
Source: Korean Household Finance and Welfare Surveys, 2010-2017.

하지만 이 질문에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뿐만 아니라 ‘대학졸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시대 비교가 아닌 코호트별 ‘소득 상승률’을 계산해야 한다. 한국인들의 유난스런 학벌에 대한 집착, 학연을 따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선후배를 챙기며,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학연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고려할 때, 세대라는 큰 정체성은 사실 그 내부에서 잘게 쪼개진 형태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학졸업 여부를 고려하여 세대 간 시계열 상의 소득 상승률을 비교하면 어떤 분포를 보일 것인가? <Figure 9>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소득을 (가구주 정보에 기반) 대학 졸업자와 비졸업자를 나누어 시기별, 코호트별로 비교한 것

이다. 첫 번째 그룹의 역-U자 모양 그래프는 1990년부터 5년 단위로 끊은 시기(period)별로, 역시 5년 출생 단위로 끊은 각 코호트 세대별 소득의 평균값들을 연결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진한 흑색 선은 2015~16년 각 코호트 세대들의 균등화 가구소득 평균을 연결한 것이다. X축에 나열된 세대군들 중 하나를 따라 12시 방향(직각)으로 올라가면, 특정 세대의 소득이 지난 27년간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주화 코어 세대인 (점선 타원에 잡힌) 1960~64년 출생 코호트는 1990~94년 (월) 평균 145만원의 소득에서 출발하여 1995-99년에는 183만원, 2000~04년 206만원, 2005~9년 249만원, 2010~14년 281만원 마지막으로 2015~16년 315만원의 월평균 소득을 기록하며 코호트들 중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하게 된다.

<Figure 9> Period-Cohort Distributions of Equalized Disposable Household Income by Education



Note: Left Panel: High(H) = College Graduate; Right Panel: Low(L) = High School Graduates or below, Source: Korean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Surveys, 1990-2016. Adjusted by Consumer Price Index.

이 1960년대 초반 출생이면서 대학 졸업장이 있는 코호트, 즉 오늘날 50대 중후반에 이르는 386 세대를 기준으로 다른 대학 졸업자 가구주를 기준으로 가계소득 상승 정도를 비교해 보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동아시아 그 중에도 한국 사회는 연공의 효과가 강력한 사회다. 이 효과를 그래프 상에서 통제하기는 쉽지 않지만, 앞의 ‘근속년수’와 같이 다른 코호트의 비슷한 ‘연령시기’의 소득 상승률을 보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코호트 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는가? <Figure 9>의 물가 상승률을 통해 보정된 코호트별·시기별 소득분포를 통해 확인해 보자. 같은 44살이라도 2007년 1963년생은 15년 전인 1992년 월소득(145만원)보다 104만원, 71.7%가 오른 249만원을 벌었다. 이에 비해 2016년의 1972년생은 2002년(202만원)보다 43만원, 21.3%가 오른 245만원을 벌었다. 3배가 넘는 상승률 차이다.

똑같은 비교를 1965~69년 코호트와 1975~79년 코호트에 적용하면, 1965~69 코호트는 1990년대 초반 대비 2000년대 후반까지 53%가 상승했지만 1975~79 코호트는 2000년대 초반 대비 2010년대 후반까지 26% 상승했다. 앞의 두 코호트 간 차이보다는 작지만 역시 두 배가 넘는 상승률 차이이다. 이 이후 코호트들은 (소득 상승의 황금기인 30대에) 예외 없이 한자리 수의 소득상승을 기록한다. 이 경향은 <Figure 10>의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 소득이 정제되어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의 간격이 급격히 줄어 있는 부분들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확인된다. 이 상승폭이 유난히 작은 세대가 1970년대 초·중반, 1970년대 중·후반, 그리고 1980년대 초·중반 출생 코호트이다. 2008~9년 금융위기의 여파를 각기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 겪은 코호트들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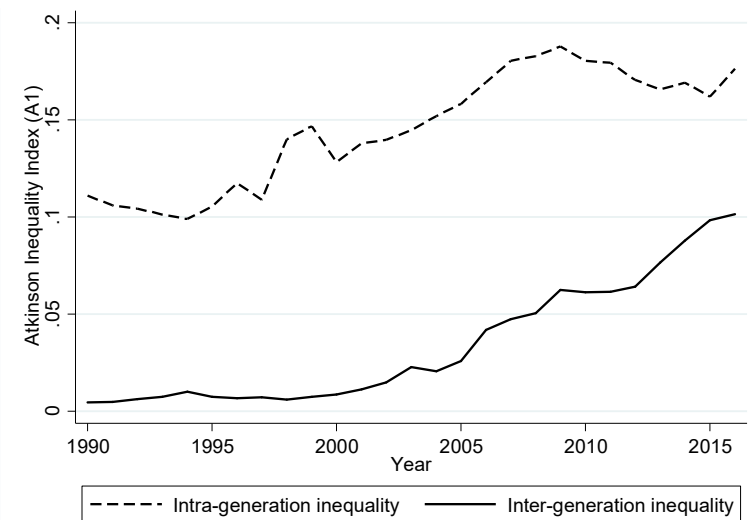
요약하면 386 세대는 그들이 시민사회로부터, 아래로부터 구축했던 권력자원을 토대로 2010년대 한국사회의 정치권력을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규모로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 세대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조직의 상층 리더십 자리는 물론 기업 수뇌부와 노동시장 상층에서도 그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압도하며 다수를 구성하고 있고 더 오래 자리에 머물러 왔다. 결과적으로, 이 세대는 코호트 간 비교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소득상승률과 소득점유율을 기록해 왔다. 산업화 세대가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통해 구축했던 한 세대의 다른 세대에 대한 위계적 지배 혹은 경제적 우위의 현상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한층 심화된 것이다. 이러한 ‘자리와 부’에 대한 한 세대의 과잉 점유는 한국 경제 최고의 성장기를 가장 오래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의 운’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세대를 압도하는 고위직 장악율과 노동시장 상층 점유율, 최고의 근속년수, 최고 수준의 소득과 자산, 그리

고 최고 수준의 소득상승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경제에서 계속해서 가능할까? 어떻게 파이가 커가는 속도는 정체되고 있는데, 특정 세대의 몫은 늘어만 가는가? 필자는 심화된 불평등의 결과-폐해를 함께 보아야만 ‘세대의 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운’의 이면은 세대 권력을 통해 만들어진 위계구조의 최하위층인 청년층의 현실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V. 경험분석 3: 세대 간 불평등과 네트워크 위계의 희생자들

1. 세대 간 불평등의 증대

<Figure 10> Within-Cohort and Between-Cohort Inequality Trends, Equalized Household Market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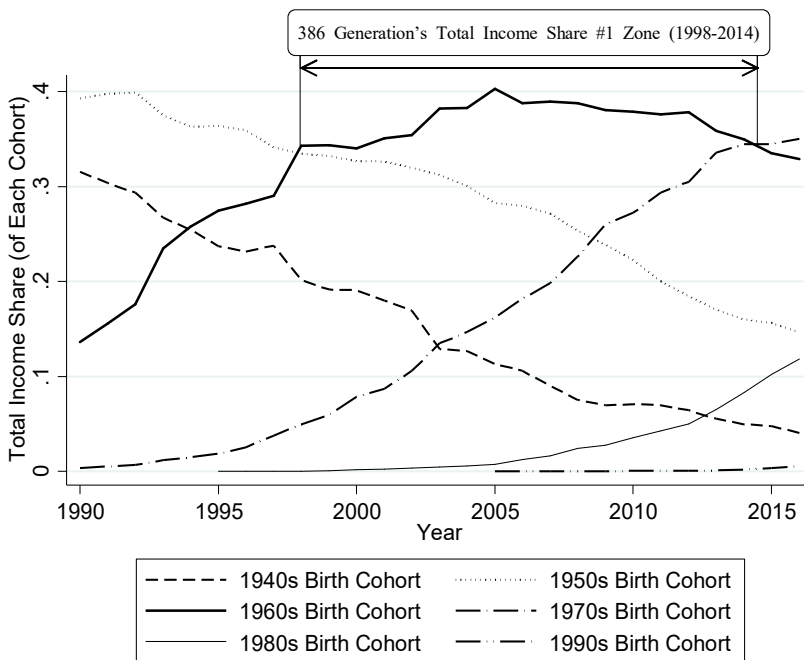
Note: Generations are constructed based on 5-year birth cohorts (1920-1990); Atkinson Inequality Index: Inequality Aversion Parameter = 1

Source: Korean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Surveys, 1990-2016. Adjusted by Consumer Price Index

이러한 세대 간 소득의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Figure 10>은 전체 불평등을 세대 내 소득 불평등과 세대 간 소득 불평등으로

분해하여 각각 그 시간상의 추이를 보여준다. 세대 내 소득 불평등이 세대 간 불평등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뉴스가 아니다. 세대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수많은 요인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대 간 소득 불평등이 2000년대 들어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대에 이르면 한층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불평등 지니계수와 유사하게 세대 내 소득 불평등이 2009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음에 반해, 세대 간 소득 불평등은 증가일로에 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최상위분위 소득과 최하위분위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김낙년, 201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세대와 연공제적 위계, 노동시장 지위의 위계가 겹쳐지며 나타는 현상이다. 이는 현 중·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 및 청년 세대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ure 11> Trends of Market Income Share, by Coh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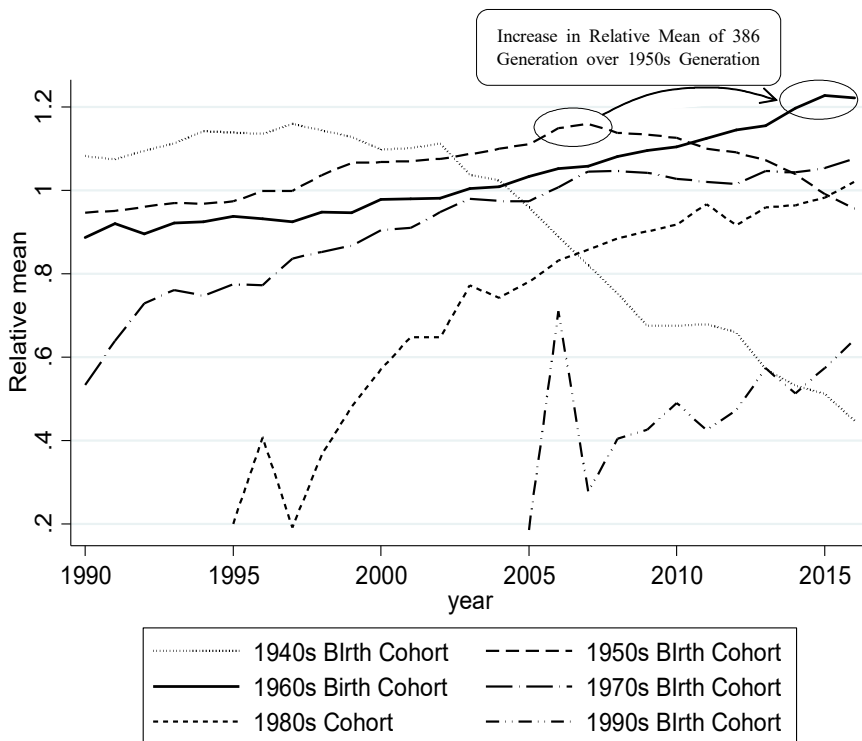


Source: Korean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Surveys, 1990-2016. Adjusted by Consumer Price Index.

그렇다면 386 세대가 점유한 부의 양과 증가 속도가 이 세대 간 불평등의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Figure 11>을 보면, 외환위기 와중이었던 1998년을 기점으로

로 386 세대인 1960년대 출생 코호트들이 전체 가구 소득의 34%를 벌어들이며 1950년대 출생 코호트들을 역전시키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후 386 세대는 2015년 1970년대 출생 코호트들에게 수위를 내줄 때까지 (다른 세대의 평균보다 7년이 더 긴) 장장 17년 동안 정상에 머물며, 전체 소득의 35~40%를 지속적으로 점유하였다. <Figure 11>은 세대별 총 가계소득 점유율이기 때문에 그 세대의 다른 모든 세대 대비 (경제활동 중인 가구주 기반 세대별 인구의 크기를 반영하는) 경제적 힘의 크기라 볼 수도 있다. 386 세대는 1995년 가계소득의 27.5%를 점유하였다. 반면, 1970년대 코호트는 2005년 가계소득의 16.2%만을, 1980년대 코호트는 2015년 10.2%만을 점유하였다. 386 세대는 동일한 삶의 시기에 소득의 크기와 인구의 크기 모두에서 다른 세대를 앞선다.

<Figure 12> Trends of Relative-Mean of Household Market Income, by Coh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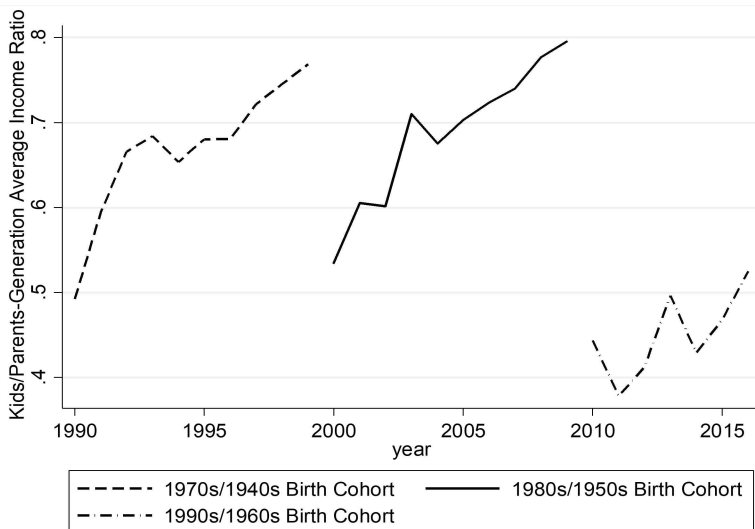
Note: Relative Mean = Income share of a generation, divided by the population share of the generation.

Source: Korean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Surveys, 1990-2016. Adjusted by Consumer Price Index.

<Figure 12>를 보면, <Figure 11>에서 2015년 1970년대 출생 코호트에 의해 역전된 수위 또한 노동시장에 잔존해 있는 1960년대 출생 코호트 수가 (사망으로 인해)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임이 드러난다. <Figure 12>는 전체 소득 점유량을 각 코호트 세대의 인구점유율로 나눈 상대평균 소득비의 경우, 386 세대의 수치가 이전 1940년대 혹은 1950년대 코호트 세대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386 세대의 소득 상승률과 규모는 연공제 사회의 50대가 누리 는 당연한 결과인가? 이 세대와 다른 세대들 간의 소득 격차는 이 전 세대에 비교 해서 얼마나 큰가? 오늘날 세대 간 불평등의 한 중요한 요소는 현 중·장년층과 노인세대 간의 급등하는 소득격차이다. 1995년 당시 50대(1940년대 출생) 소득 대비 (분모) 70대(1920년대 출생) 및 80대(1910년대 출생) 노인 세대의 소득(분자) 비율은 각각 54퍼센트와 39퍼센트였다. 10년 후 2005년, 당시 50대(1950년대생)와 70대(1930년대생) 및 80대(1940년대생) 간의 소득 비율은 각각 50퍼센트와 30퍼센트였다. 이에 비해, 2015년 50대(1960년대생) 소득 대비 70대(1940년대생)와 80대(1930년대생)의 소득 비율은 42퍼센트와 22퍼센트로 급격히 추락하였다. 386 세대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인 현 40대)가 이전 세대의 중·장년층에 비해서 부모 부양을 덜 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 또한 크다. 이는 동시대에 급등하는 노인빈곤을 설명하는 한 요소일 것이다.

<Figure 13> Adult Inter-Generational(Birth Cohort) Income Comparison(rate)



Source: Korean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Surveys, 1990-2016. Adjusted by Consumer Price Index.

동시대 세대 간 불평등의 다른 요소는 중·장년층과 청년세대 간의 소득격차이다. <Figure 13>은 1990년대의 50대 대비 20대(1970년대/1940년대 출생 코호트), 2000년대의 50대 대비 20대(1980년대/1950년대 출생 코호트), 그리고 2010년대 50대 대비 20대(1990년대/1960년대 출생 코호트)의 소득 상승률과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각 시대별로 장년층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의 평균소득을 비교한 결과, 2010년대 동시대의 청년들의 소득의 규모와 상승률이 이전 세대 청년들의 것들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출생 코호트가 1990년에는 부모 세대 소득의 49퍼센트, 1996년에는 68퍼센트를 달성했고 1980년대 출생 코호트는 2000년에 53퍼센트, 2006년에는 72퍼센트를 달성했다. 이에 비해 오늘 날의 20대 청년 세대인 1990년대 출생 코호트는 2010년 겨우 44퍼센트를 달성했고, 2016년에 이르러서도 52퍼센트에 머물러 있다. 절댓값과 상승률 모두에서 부모 세대 대비 역대 최저의 기록이다. 부모 세대(386 세대) 소득이 다른 부모 세대보다 높기 때문이기도, 오늘의 청년 자식 세대 소득이 다른 시대의 자식 세대보다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¹⁰⁾

2. 좁아진 진입로, 격화된 경쟁: 네트워크 위계 하의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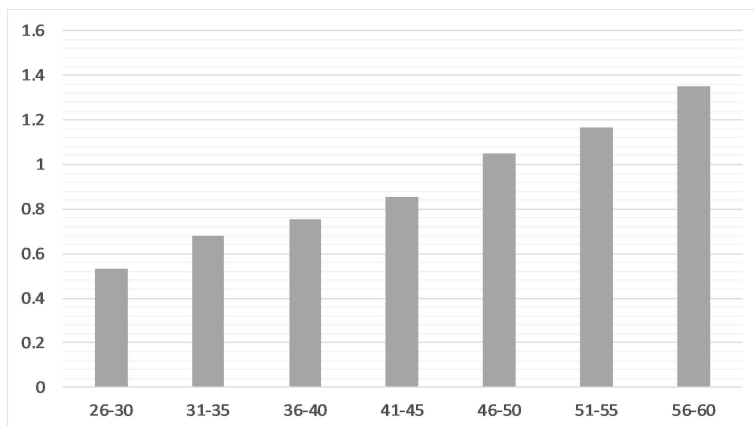
전 세대들과 오늘날 청년 세대가 마주한 경쟁의 장에 차이가 있다면 두 가지이다. 2010년대 청년 세대는 전 세대들과 달리, 구조적 불경기 아래서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줄어들어만 가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딜레마는 저출생으로 경쟁에 참여하는 수가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경쟁의 정도는 더 극심해진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1970년대 초·중반 출생 세대가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오늘날 청년 세대들은 끝 모를 불황의 터널의 입구에서 터널을 좀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열차의 자리 몇 개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구조적 불황이 몇 ‘세대’를 집어삼킬지도 모를 상황이니 목숨을 건 경쟁일 수밖에 없다.

10) 단, 이러한 가구소득의 세대 간 차이의 원인에는 청년층 일자리의 질 저하, 20대 구직난으로 인한 취업시기의 연기, 최근 증대된 ‘만혼’과 ‘비혼’ 경향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고학력 청년층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취직을 연기하면서 2016년까지 1990년대 출생자들 중 가구를 구성하지 못한(고학력 미취업자)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으므로, 현 20대가 가구주인 가구소득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활동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임금소득자’만을 따로 분석할 경우, 2005년 1980년대/1950년대 출생 코호트 간 임금 비율은 57.3%, 2015년 1990년대/1960년대 출생 코호트 간 임금 비율은 51%이다. 청년 세대의 부모 세대 대비 소득비가 줄고 있는 경향은 동일하나 차이는(가구 단위 조사인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훨씬 좁혀졌다. 단, 이 결과는(50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외된 값이다.

청년 세대가 마주한 또 다른 현실은 세대 내부의 극심한 불평등으로 인해 출발선에서 공정한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른바 금수저/흙수저가 상징하는 부모의 힘이 청년 세대의 출발 자체의 경쟁을 다르게 만들어 놓았음을 실증하는 보도와 연구들은 지천이다. 필자 또한 앞에서 산업화 및 386 세대의 부상과 위계구조의 공고화를 설명하면서 오늘날 청년 세대가 처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의 실상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젊은 세대일수록 근속년수는 더 짧아지고 소득의 상승률은 더 낮아지고 있으며, 세대 내부의 자산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이철승·정준호, 2018).

앞의 <Figure 5>에서, 결합 노동시장 상층과 중·하층의 분포가 항아리 모양(2004년)에서 상층이 두텁고 중·하층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역삼각형(2015년) 구조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쫓겨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명령을 내리며 ‘부리는’ 자들은 더 많아진 것이다. 이 상층의 ‘노령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각 기업조직이 노령화됨에 따라 연공제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은 총 노동비용의 상승압력에 처했다. 자본과 기업의 수뇌부는 어떻게 이 압력에 대처하였는가? 기업이 매출과 수익을 통해 그만큼 덩치가 커졌다면 모르겠으나 다른 조건이 같다면, 총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 젊은 세대에 대한 신규채용을 줄일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하였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청년고용위기의 한 원인이다. 50대가 늘어난 상층 노동시장에서 줄어든 세대는 40대, 30대, 그리고 20대였다. 특히, 2004년 상층의 24.5%를 구성했던 20대는 2015년 17.3%로 줄어들었다(<Figure 6> 참조).

<Figure 14> Entrance/Survival Rates: Total Number of Workers Divided by College Graduates within the High Class of Combined Labor Market Status, 2015



하지만 386 세대부터 시작된 출산을 저하로 인해 청년 세대의 전체 노동인구는 오히려 감소해 왔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는 왜 갈수록 더 심한 박탈감과 경쟁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가? 한 가지 설명은 이 세대의 높은 대학 진학률이 ‘실질 경쟁률’을 상승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각 세대 전체 임금노동자 (혹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동시장 지위 상층 진입률/생존율을 계산하지 않고 대학 졸업자만을 놓고 보면, 상층으로의 진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진 것이다. <Figure 14>는 이 가설을 결정적으로 지지한다.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상층 진입/생존율(2015년)을 계산하자 연령별로 상층 진입률/생존율은 극적으로 벌어진다. 오늘날 20대 후반은 53.4%이지만 386 세대 경우 117%(1965~69년생)와 135%(1960~64년생)이다. 어떻게 대학 졸업자의 생존율이 1을 넘을 수 있는가? 답은 대학 졸업자보다 노동시장상층 자리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386 세대의 경우 상층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굳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고졸자도 상층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현 20대 후반은 대학 졸업자 중 둘 중 하나만 상층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386 세대를 비롯한 현 중·장년층 세대가 산업화 세대에 비해 아이는 덜 낳으면서 어떻게든 자식들은 대학에 보낸 결과이다. 이들이 (상층 노동시장을 과대점유한 채로) 집단적으로 자식의 수를 줄여 집중적으로 교육 투자를 한 결과, 대학 졸업자들 간의 상층 대기업 정규직 진입을 위한 투쟁이 한층 격화된 것이다. 이 과잉 자격의 청년 세대는 노동시장 상층에 진입할 자격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입하지 못하는 다수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상층에 진입하지 못한 절반의 대학 졸업자들은 중·하층에, 즉 중소기업에 혹은 비정규직으로 진입하거나 노동시장 진출을 유예한 채 끊임없이 상층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왜 수는 줄었는데 경쟁은 격화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 386 세대를 필두로, 40대 후반~60대 초반의 상층 연장자 그룹이 쌓아 놓은 신분화된 기득권 성벽 아래에 그들의 자식들이 스펙 경쟁을 하며 필사적으로 기어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세대론과 계급론이 겹쳐지는 순간이다.¹¹⁾

11) 또 다른 설명은 이 세대는 공정성에 훨씬 민감한 세대란 것이다. 네트워크 위계를 통해 노동시장 상층 기득권이 품앗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자식들을 특혜로 취직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취직자의 청탁비율이 80%를 넘었던 강원랜드 사건을 보라), 이 세대들은 취업문이 실제 수치보다 더 ‘좁아져 있다’고 느낀다. 다시 말해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쟁의 실상에 대해서 이전 세대들보다 더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 세대는 상층 진입 게임의 참가자들의 수는 늘고, 경쟁은 격화되었지만, 게임의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어쩌면 영원히 ‘공정한 게임’을 회구하는 세대이다.

VI. 결론

1. 나가며

386 세대의 리더들은 산업화 세대가 구축했던 1920년대 후반-1950년대 초반 출생자들로 구성된 세대 간 연대를 1997년부터 2016년에 걸친 20년의 정치권력 투쟁을 통해 사실상 와해시켰다. 이를 위해 386 세대의 리더들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걸치는 대안적 세대 연대(alternativ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를 구축하였고, 이념적으로/정치적으로 이들을 자신들의 하부 지지세력으로 편입시켜 공고한 투표블락(voting block)으로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물론 이 386 세대 리더들의 성공 이면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동세대 내부의 고통과 희생이 동반된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이 세대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세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핵심 내부자 그룹(core inner circle)’을 구성하여 선출직과 임명직을 독식하는 ‘점유의 정치’를 수립하였다. 세대 간 연대의 과실이 특정 세대의 특정 네트워크 집단에 의해 독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된 바로 그 시점에 세대 간 정치권력의 분배는 가장 불평등해졌다.

386 세대 리더들은 기업조직 내부에서도 유사한 ‘점유의 정치’ 체제를 구축하였다. 산업화 세대의 리더들이 1997년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업조직에서 물러나고 386 세대의 아랫세대들은 386 세대와 같은 ‘대량 입사를 통한 충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20년 간 기업 내 386 세대의 권력과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강화되었다. 기업 내 386 세대 리더들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386 세대 리더들이 시민사회조직들의 근간을 일구었듯이, 세계화의 참병으로 기업조직의 바닥을 일구었고 이를 통해 2010년대에는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위계체제의 정점에 - 그것도 한국 기업사상 최대규모로 - 올려놓는 데 성공하였다.

386 세대의 리더들이 기업조직의 상층을 장악하는 동안 자본은 세계화와 함께 격화된 경쟁적 시장에서 한국의 기업조직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위계조직을 ‘유연화 된 위계체제’로 업그레이드하였다. 바로, 기존의 연공에 의한 위계적 직무 배분 시스템에 ‘내부자(정규직)’와 ‘외부자(비정규직)’의 구별을 통한 차별적 보상시

시스템을 결합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조직이 경기 사이클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로써 2000년대 이후 산업현장과 공기업, 공무원 조직,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른 신분을 가진 노동자들끼리 연공과 고용형태 상의 차별적 신분이 결합된 위계체제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정착되었다. 386 세대 기업의 리더들은 바로 이 유연화 된 이중화 경제의 최상층에 최대 다수로 살아남은 세대이다. 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유연화 시스템과 맞서 싸워 시민사회 전체의 노동권과 연대의 가치를 지켜야 할 (386 세대) 노동조합의 리더들은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만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연공과 고용형태에 의해 분절된 노동시장의 계층화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로써, 386 세대 리더들이 정치와 경제 권력의 상층을 점유하는 지난 20년 동안 자본이 의도했던 ‘이중화(dualized)된 노동시장 구조’는 완성되었고, 한국사회의 신분계급화는 한층 깊은 수준으로 구조화되었다.

386 세대의 리더들 의해 구축된(정치사회), 혹은 적어도 방조된(기업 및 노동시장) 정치와 경제의 ‘위계체제’는 한국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 첫째는 거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위계체제 상층 독점이 장기화되고 그로 인해 유교 연공사회의 대전제인 세대 간 ‘세대교체’의 룰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386 세대가 정치권력과 기업조직, 상층 노동시장 모두에서 이 전 세대보다 더 큰 규모로 장기생존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세대 네트워크 내부에 속한 386 세대 상층 리더들과 그에 속하지 못하는 동세대 하층 및 다른 세대들 간의 정치·경제적 권력자원의 갭이 커지면서 세대 내, 세대 간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자본이 주도한 유연화 및 이중화 경제 구조가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상층 내부자로 편입되어 있던 현 중장년층(40대와 50대)을 중심으로 임금과 근속을 통한 수혜를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악화된 현 중·장년 세대 내부, 그리고 이들 세대와 다른 세대 간에 증대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은 이 글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세대의 정치’가 ‘위계구조’로 전화되면서 발생한 결과이다.

셋째, 최대 규모의 최고의 응집성과 연계성을 가진 세대 네트워크가 국가와 경제, 시민사회의 상층 권력과 자리를 장기간 장악하면서, 세대 네트워크와 상층 노동시장 내부자들의 연공제 담합구조에 진입하지 못한 주변부의 외부자들 - 청년세대 - 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와 보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의 소득과 주거의 빈곤화(권현지, 2018) 및 자산의 양극화(이철승·정준호, 2018)를 지적하는 연구들은, 자본, 386 세대 및 그 주변부 세대 상층 노동자들 그리고 386 세대 대기업 노

조가 (의도하지 않은) 공모를 통해 만들어낸 노동시장 이중화의 최대 피해자들이 동시대 청년들임을 보여준다.

2. 한국형 위계체제의 완성: 네트워크 위계

서두에서 정의했듯이 ‘네트워크 위계’는 ‘네트워크’와 ‘위계’가 톱니바퀴처럼 물려 돌아가며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위계체제가 조직구성원의 직무 간 수직적 명령 및 복종체제와 보상체제를 규정하고, 구성원의 노동을 통한 복종과 충성을 이끌어내는 생산과 수취의 기제라면, 네트워크는 조직 상층 지도부가 조직 내부와 외부에 조직의 목표 달성과 자신의 권력 유지/재생산을 위해 수평적으로 구축한 사회적 연결망(social ties)이다. 비유하자면, 세대 네트워크는 노동시장과 조직 내·외부에 구축된 위계체제라는 수직적인 계층사다리를 엮어주는 수평적인 가로줄이자 매듭이다. 위계체제의 상층 리더들은 세대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의 자리를 상호 보장하며, 보상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영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대 네트워크는 기업, 정당, 시민사회 조직들 간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정보와 자원을 동원하고, 협의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세대 기반 인적 교통망이자 연대체제로 정의된다. 세대 네트워크는 위계체제와 결합함으로써 자원동원과 교환·정보공유·협력·수취체제 구축이라는 한국형 위계체제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중화 경제 시대의 한국형 위계체제는 연공제/호봉제로 구조화된 관료제의 직급체제로 내부자를 통합하고, 외주/하청/단기계약/직무급을 통해 외부자를 관리한다. 산업화 세대가 구축했던, 정규직만이 존재했던, 즉 모두가 내부자였던 외환위기 이전의 기업 체제에 외부자가 덧붙여짐으로써 조직 내부와 외부에 21세기판 신분제적 위계가 확립된 것이다. 오늘날 청년 세대의 고통은 더욱 치열해진 상층 진입게임에서 이들의 상당수가 내부자가 아닌 위험 및 애로업무를 전담하는 하청·파견·비정규직이라는 외부자로서 직업세계를 처음 경험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386 세대의 ‘세대 네트워크’가 이러한 위계체제와 결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긍정적 의미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지만, 부정적 의미에서는 자리와 충성이 교환되고, 파벌이 확장되며, 권력직 및 이권의 교환 및 장기보전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보다 응집적인, 내적으로 강고한 386 세대의 네트워크가 각 조직들의 상층을 장악한 채 장기집권하며, 연공제 및 내부자/외부자의 이중노동시장 체제를 통한 ‘수취체제’와 결합할 경

우, ‘불평등과 이중화/양극화의 증대’와 ‘비효율과 지대추구행위의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양자가 서로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386 세대의 리더들이 주도한 세대의 정치와 그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라는 이 연구의 주장에 대한 반론들을 의식하고 있다. 첫째는 특정 세대 내부의 일부 집단이 주도한 정치와 그 결과에 대하여 세대 전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시장 위계체제 수립의 배후에는 결국 (필자도 적시한 바대로) 자본이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세대 간 불평등분석이 아닌 계급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불평등의 확대 시기에 386 세대가 상층을 점유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고, 오히려 외부 환경요인(세계화와 탈산업화)이 궁극적인 불평등의 요인이라는 것이다.¹²⁾

첫 번째와 두 번째 비판과 관련, 386 세대 및 그 주변세대 상층 노동시장 점유자들은 세대 네트워크의 위계체제 구축 활동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그 궁극적 기획자가 ‘자본’이라 하더라도, 그 수혜를 일정 정도 공유했다는 점은 변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면, 정규직/비정규직의 신분화와 하청업체 착취를 직접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자본이 했더라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수혜를 공유한다. 노동조합의 전투적 임금상승 투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임금 상승의 수혜는 (기업 간 조정과정/패턴교섭을 통해) 40~50대 상층 임금 노동자 전체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구조적 불경기 아래, 노동시장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청년세대와 여성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장 상층 (40~50대 중·장년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은 고스란히 남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화로부터 가장 고통 받는 집단은 동시대 청년들이므로, 연공제 하의 유연화와 이중화는 세대정치를 발화시킬 수밖에 없다. 즉, 연공제적 위계체제와 내부자/외부자의 분절구조로 인해 계급과 세대가 밀접하게 착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계급과 연공제적 위계 모두에서 최하층에 위치한 동시대 청년층의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한 기회에 대한 요구는 지극히

12) 이 문제들을 제기해 준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외에도, 한 논평자는 세대 네트워크의 현존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이 네트워크에서의 자원이동과 불평등으로의 전환 메커니즘 또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세대 내 불평등 상승의 피해자/소외자인 386 세대 내부의 하층 빈곤계급에 대한 분석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두 문제 모두(세대 간 불평등에 치중한)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 천착할 지점이다. 또한, (<Figure 5>에서 드러나는) 남성 위주 ‘네트워크 위계’의 ‘소외자’이자 최근 부상하는 ‘경쟁자’인 여성에 대한 섹션은 분량상의 제약으로 최종본에서 빠졌다. 이 부분은 출간 예정인 필자의 책, [불평등의 세대(가계)](문학과 지성사)에서 자세하게 제시될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세 번째 비판은 (386 세대를 포함한) 한국의 상층 노동시장 점유자들의 끝 모를 임금상승과 그로 인한 불평등 확대는 세계화에 적응한 (상층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 때문이지 중하층 혹은 다른 세대에 대한 착취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과 어느 정도 통한다. 이는 별도의 논쟁과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00인 이상 한국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을 가진 미국·일본·프랑스의 대기업 노동자들보다 각각 28.7%, 49.5%, 16.4% 더 높았다. 이에 비해 1~4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미국의 절반, 일본의 75%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노민선, 2018). 또한, 10인 이상 고용기업의 1년차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경우,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배율은 한국이 329로 123인 핀란드의 2.7배, EU 15개 회원국 평균 170의 1.93배에 달했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세계화와 탈산업화가 전세계적인 동시대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공통 현상이라면,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가, 그리고 중·장년층과 청년층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이토록 커야 할 이유가 없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차이의 상당 부분은 자원과 권력을 더 많이 보유한 상층 노동시장의 중·장년층 노동자들(내부자들)이 중·하층과 청년층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전유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3. 합의: 세대 간 형평성의 정치를 위하여

산업화 세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는 한 가지였다. 바로 빠른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끊임없는 창출이었다. 386 세대는 산업화 세대가 제약한 자유와 민주를 구하기 위해 그들을 치받았지만 부모 세대가 제공한 ‘풍성한 일자리’와 ‘일자리를 통한 복지’ 모델의 수혜를 받은 세대이다. 물론, 이 세대는 민주화를 이뤄냈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를 세계화 시대에 적응시켰다. 그렇다면 그 수혜가 다음 세대로 어떤 형태로든 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86 세대의 상층 리더들은 정상에 오른 바로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할 책임이 있다. 신분제 사회를 만들어 놓고 내 자식이 신분제 사회의 상층에 오를 확률을 높이는 전략과, 신분제 사회를 해체하고 내 자식과 그 자식들이 자유로운 개인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사회적 위험을 분담하며 노동의 대가를 적절히 공유하는 사회를 만드는 전략 중 어느 쪽이 현명한가? 386

세대는 적어도 후자를 공약하며 정치와 시장에서 집권했다. 그렇다면 ‘세대의 기회’를 아예 가져보지도 못하고 위계체제의 게임의 룰에 ‘민주적으로’ 좌절해야 하는 자식세대에게 최소한, 아니 최대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자신들이 가진 정치·경제적 권력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롤스(Rawls, 1971)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오늘의 청년 세대에게 최대의 기회를 보장해야 ‘기회의 균등’(equity)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 세대 간 이전의 전략 마련과 세대 간 형평성 증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참고문헌

- 권현지. 2018. “제도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협약의 한국적 가능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 토론회 발표문』 (2018.11.27.),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 Kwon, Hyunji. 2018. “A Prospect for a Social Pact in South Korea to Protect Labor-market Outsiders.”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Policy Discussion Paper* (2018.11.27.). Seoul, Press Center.
- 김낙년. 2018.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사회과학연구』 25(2): 175-195.
- Kim, Nak-Nyeon. 2018. “Trends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5(2): 175-195.
- 김수정. 2018. “1990년대 이후 코호트 간 소득 격차와 빈곤위험 분석.” 『비관사회정책』 59: 69-102.
- Kim, Sujeong. 2018. “A Cohort Analysis of the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Risks since 1990s.”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59: 69-102.
- 김위정·김왕배. 2007. “세대 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6): 1-36.
- Kim, Wui-Jeong and Wang-Bae Kim. 2007.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 and Influential Factor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1(6): 1-36.
- 김종성·이병훈. 2014.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90: 296-330.
- Kim, Jong-sung and Byoung-Hoon Lee. 2014. “The Effects of Parents’ Social Class on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s and Perspectives* 90: 296-330.
- 노민선. 2018.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 토론회 발표문』(2018.11.27.).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 Rho, Minsun. 2018. “Plans to Improve Productivity for Small-to-Medium Size Firms and Encourage Profit-sharing between Large and Small(sub-contracting) Firms in Order to Reduce Wage Differentials.”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Policy Discussion Paper*(2018.11.27.). Seoul, Press Center.
- 만하임, 칼. 2013[1928, 1929]. 『세대 문제』 이남석 역. 책세상.
- Mannheim, Karl. 1952[1928, 1929]. “The Problem of Generations.” pp.276-320 in K.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박재홍.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37(3): 1-23.
- Park, Jae-Heung. 2003. “A Study on the Concept of Generation: Cohort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7(3): 1-23.
- 성정룡. 2015. “세대균열과 세대연대.” 『한국사회복지학』 67(4): 5-29.
- Seong, Kyoung-Ryung. 2015. “Intergenerational Cleavage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Differential Effects on Political Arena and Social Policy Real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4): 5-29.
- 신동균. 2013. “베이비 붐 세대의 근로생애사 연구.” 『보건사회연구』 33(2): 5-32.
- Shin, Donggyun. 2013. “Employment of the Baby Boom Generation over the Life Cycl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2): 5-32.
- 오하나. 2010. 『학출: 80년대, 공장으로 간 대학생들』. 이매진.
- Oh, Hana. 2010. *Hakchul: 80nyeondae, gongjang-euro gan daehaksaengdeul*. Seoul: Imagine pub.
- 윤성민·홍장표·정우식. 2000. “중소기업-대기업의 관계: 협력유형 및 산업정책.” 『중소기업연구』 22(2): 209-236.
- Yoon, Seong min, Jang Pyo Hong, and Woo Sik Jung.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mall-and-Medium Enterprises and Large Firms: Collaboration Types and Industrial Policies.”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22(2): 209-236.
- 은수미. 2005.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연구: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구조 분석.”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Eun, Soo-Mi. 2015. “‘Political Empowerment Modes’ of the Korean Labor Movement: An Analysis of the Relational Structure between the Labor Movement and the Civic Movement.”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이내영·정한울. 2013.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의정연구』 40: 37-83.
- Lee, Nae-Young and Han-wool Jeong. 2013. “Sedaegyunyeor-ui guseong yoso: kohoteu

- hyogwawa yeollyeong hyogwa.”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40: 37-83.
- 이병훈. 2003. “비정규노동의 작업장 내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례연구: 사내 하청노동자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7: 387-402.
- Lee, Byung-Hoon. 2003. “A Case Study on the Social Relationship of Irregular Workers within Workplaces.” *Economy and Society* 57: 387-402.
- 이철승. 2016. “산별노조 운동의 성과와 한계.” 『다중격차,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 전병유·신진욱 엮음, 페이퍼로드.
- Lee, Cheol-Sung. “The Achievement and Limitation of Industrial Union Movements in South Korea: Inequalities in Wage and Social Welfare within and between Industries.” pp.59-74 in *The Structure of Multiple Inequalities in Korean Society*, edited by B-Y Cheon and J-W Shin. Seoul: Paperroad.
- _____. 2017. “결합노동시장지위와 임금불평등의 확대, 2004-2015.” 『경제와 사회』 114 (3): 103-144.
- _____. 2017. “Combined Labor Market Status and Growing Wage Inequality in South Korea, 2004~2015.” *Economy and Society* 114(3): 103-144.
- _____. 2018. “한국 노동운동과 복지국가의 미래 전략: 트라이레마와 유연화·이중화의 극복.” 『비판사회정책』 58: 197-241.
- _____. 2018. “The Future Trajectories of Korean Labor Movement and Welfare State: Trilemma and Flexibilization/Dualization of Labor Market.”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58: 197-241.
- 이철승·정준호. 2018. “세대 간 자산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증대.” 『동향과 전망』 104: 260-317.
- Lee, Cheol-Sung and Jun-Ho Jeong. 2018. “Intergenerational Wealth Transfer and Increasing Wealth Inequality within Generation, 1990-2016.”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 104: 197-241.
- 전병유·신진욱 편. 2016. 『다중격차: 한국의 불평등구조』. 페이퍼로드.
- Cheon, Byung You and Jin-wook Shin (eds). 2016. *Dajunggyeokcha: Hangugui bulpyeongdeunggujo*. Seoul: Paperroad.
- 전병유. 2018.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절화의 구조와 시사점.” 『노동리뷰』 163: 21-35.
- Jeon, Byung-Yu. 2018. “Urinara nodongsijang bunjeolhwaui gujowa sisajecom.” *Labor Review* 163: 21-35.
- 전상진.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한국사회학』 38(5): 31-52.
- Chun, Sangchin. 2004. “The Poverty of the Generation Research: A Study on the Generation Research 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8(5): 31-52.
- 정상호. 2011. 『민주주의의 제도화』. 모티브북.

- Jeong, Sang Ho. 2011. *Minjujuuiui jedohwa*. Seoul: Motivebook.
- 정승국. 2017. “제조업 대기업의 작업장 체제와 개선방안.” 『1987년 이후 30년: 새로운 노동체제의 탐색』 3장 65-91쪽.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2017-14.
- Chung, Seung-Kook. 2017. “The Production System of Korean Large Manufacturing Firms and Its Improvement Plan” pp. 65-91 in *Thirty Years after 1987: Exploring A New Labor System*, Ch.3. Sejong: Korea Labor Institute.
- 정이환. 2013. 『한국고용체제론』. 후마니타스.
- Jung, Ee Hwan. 2013. *Hangukgoyongchejeron*. Seoul: Humanitas.
- 정준호·전병유. 2015. “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 전환의 가능성.” 『노동리뷰』 129: 51-64.
- Jung, Jun-Ho and Byung-Yu Jeon. 2015. “Hangukgyeongjeui ijunghwawa seongjangcheje jeonhwanui ganeungseong.” *Labor Review* 129: 51-64.
- 조성재·이병훈·홍장표·임상훈·김용현. 2004.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와 고용관계의 계층성』. 한국노동연구원.
- Cho, Seong-Jae, Byung-Hun Lee, Jang-Pyo Hong, Sang-Hun Lim, and Yong-Hyun Kim. 2004. *Jadongchasaneobui dogeupgujowa goyonggwangyeui gyecheungseong*. Sejong: Korea Labor Institute.
- 조성재. 2009. “자동차산업의 노동유연성과 고용관계.” 『산업관계연구』 19(3): 57-89.
- Cho, Seong-Jae. 2009. “Labor Flexibility and Employment Relations in the Automobile Industry.”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19(3): 57-89.
- 한국노동연구원. 2015. 『임금 및 생산성 국제 비교연구』. 고용노동부.
- Korea Labor Institute. 2015. *Imgeum mit saengsansung kukje pikyo yeonku*.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Baiocchi, Gianpaolo, Patrick Heller, and Marcelo K. Silva. 2011. *Bootstrapping Democracy: Transforming Local Governance and Civil Society in Brazil*. Stanford University Press.
- Cohen, Jean and Andrew Arato.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A: MIT Press.
- Gamson, William A. 1990. *The Strategy of Social Protest*. Belmont, CA: Wadsworth.
- Habermas, Jürgen. 1991[1962].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ranslated by Thomas Burger. Cambridge, MA: MIT Press.
- Jessop, Bob, Kevin Bonnett, Simon Bromley, and Tom Ling. 1984. “Authoritarian populism, two nations and Thatcherism.” *New Left Review* 147(1): 32-60.

- Kertzer, Davi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25-149.
- Klein, Steven and Cheol-Sung Lee. 2019. "Politics of Forward and Backward Infiltration: Towards a Dynamic Theory of Civil Society." Forthcoming in *Sociological Theory*(March issue).
- Korpi, Walter. 1985. "Power Resources Approach vs. Action and Conflict: On Causal and Intentional Explanations in the Study of Power." *Sociological Theory* 3(2): 31-45.
- Koo, Hagen. 2001. *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 Kriesi, Hanspeter. 1996.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New Social Movements in a Political Context." pp. 152-184 in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edited by D. McAdam, J.D. McCarthy, and M.N. Za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rzman, Charles. 1996. "Structural Opportunity and Perceived Opportunity in Social-Movement Theory: The Iranian Revolution of 1979."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1): 153-170.
- Lee, Cheol-Sung. 2016a. "Going Underground: The Origins of Divergent Forms of Labor Parties in Recently Democratized Countries." *Sociological Theory* 34: 220-249.
- . 2016b. *When Solidarity Works: Labor-Civic Networks and Welfare States in the Market Reform Er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Namhee. 2008. *Making of Minjung: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Mahoney, James and Kathleen Thelen(eds). 2009.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rthy, John D. and Mayer N. Zald. 1977.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6): 1212-1241.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Rogers, Joel. 1990. "Divide and Conquer: Further Reflections on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American Labor Laws." *Wisconsin Law Review* 1: 1-147.
- Therborn, Göran. 2013. *The Killing Fields of Inequality*. Polity Press.

Weingast, Barry R. 1997. "The Political Foundation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the Law."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2): 245-263.

이철승은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복지국가, 노동시장 및 자산 불평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Social Forces*, *Sociological Theory*, *World Politics*, 『경제와 사회』, 『동향과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등에 논문을 발표했고, 저서로 『연대가 실현될 때』, (후마니타스, *When Solidarity Works*, Cambridge Univ. Press, 2016)와 『불평등의 세대(가계)』(문학과 지성사)가 2019년 출간 예정이다.

[2018.10.26 접수; 2018.12.30 수정; 2019.01.18 게재확정]

Generation, Class, and Hierarchy: 386-Generation in Power and Increase in Inequality

Cheol-sung Lee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identifies an accumulating process of power and wealth led by the ‘386-generation, so-called the generation of democratization’(D-generation, hereafter) as a process of structu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Korean-style hierarchy system.’ For this identification, first of all, this article highlights D-generation’s work of the ‘politics of occupation’ by gradually occupying the state from being the leaders of the civil society. Second, this article underscores the ‘hierarchy system’ established in the labor market and the firm organization by capital to confront the market competition, intensified with globalization, as well as the ‘power within the company’ from D-generation, who has been the beneficiary of the system. Through these two processes, the D-generation was able to establish more internally cohesive ‘generational power resources’ across the state, civil society, and the market. To test these arguments, the study shows - through analyzing original data sources and various survey data - that the D-generation has accumulated more social and political capital than other generations in civil and political society. In the labor market, the generation has succeeded in advancing to top-tier leader’s positions in the firms, and occupied the majority in the upper-class labor market status. In turn, the study demonstrates that such cohesive generational networks led to longer duration of members of the generation in firms and higher rates of income increases, which exacerbates excessively competitive job market situations for younger generation. The study concludes with a theorization of the concept, ‘network hierarchy’, making a request for the politics of inter-generational equity.

Key words: 386 generation, generational power resource, politics of occupation,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network hierarchy, intergenerational equity